

第243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4 號

國會事務處

2003年10月23日(木) 午前10時

議事日程(第14次本會議)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 o 의원신상발언 69

(10시12분 개의)

○副議長 趙富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14분)

○副議長 趙富英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세 분으로 오전에 네 분 의원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시간은 대략 6시 30분경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성남 중원 출신 조성준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습

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힘들어졌고 행복 지수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3일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고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없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숙자는 다시 늘어가고 있으며, 건강보험 체납자는 증가하였고,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 가을 우리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그래도 金大中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盧武鉉 정부가 내세운 참여복지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고, 노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노인복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결혼 대비 이혼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며, 사회공동체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 당을 대신해서 현안질문을 법무부장관에게 하겠습니다.

장관, 좀 나와 주세요.

지난 10월 6일 법사위 국감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6월, 대선 과정에서 김성래 전 부회장에서부터 이광재 씨한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지금 수사상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했다는 취지가 어떤 내용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수사 내용이 아니고 지난 10월 6일 국감에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6일 법사위 국감에서 진술이 되기를……

○**法務部長官 康錦實** 대검찰청 국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렇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답변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6월, 대선 과정에서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 부터 이광재 씨한테 돈을 주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와 관련해서는 국감 후에 자세한 확인은 아니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성준 의원** 송광수 총장의 국감 답변 내용이 “이광재 씨한테 김성래 전 부회장이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확인은 했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다” 이렇게 법사위 국감에서 보고한 내용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그와 같이 보고받았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의 최측근 인사가 돈을 받았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왜 돈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돈을 주었는지의 여부도 일방적 진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상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아니, 총장께서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나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돈을 주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 진술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조성준 의원** 김성래 전 부회장은 120억 원을 대출해서 115억 원을 사기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115억 원을 대출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재 95억 원의 행방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이것은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절대빈곤인구가 인구의 10%를 넘어섰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우리 사회에 700만 명 가까운 빈곤인구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國務總理 高建**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조성준 의원** 이는 매우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단기적인 대응요법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신빈곤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정부는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우선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년도에는 우선 급한 일부 의료급여를 지급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새해 예산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준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초기의 도입 취지와 달리 부정수급자방지법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절대빈곤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급자수는 2001년에 155만 명에서 금년 5월 현재 135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 그러면 이들 20만 명이 그동안 잘 살게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國務總理 高建** 148만 명에서 142만 명으로 줄

었다가 다시 1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에 수급자 선정을 처음 실시한 이후에 수급 부적격자가 발견이 되어서 탈락이 된 데 따른 감소 추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어려움 등을 생각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증가하리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아울러 3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지 못해서 최저 빈곤층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내용 중 교육·의료·자활 등에 부분급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 내용은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國務總理 高建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부분적인 의료급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교육·의료·자활 급여를 포함한 종합지원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새해……

○조성준 의원 연말까지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예, 마련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다음으로 높은 이혼율과 가족해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우리 사회는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결혼 대비 이혼율은 47.4%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30만 6000쌍이 결혼했는데 14만 5000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흔들리면서 가족해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의 여성화 문제와 빈곤가정의 아동방임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부처에서 현재 가족해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느 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족해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생활의 보장 측면 또 일자리를 제공하

는 측면, 건전한 가족관의 보급,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빈곤가정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구성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금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빈곤의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에이즈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1년간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출입국자 수는 서울 인구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1년간 2500만 명이 출입국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인 181개국 6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인구 이동, 물적 이동이 확대되면서 각종 전염병의 국제이동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20년 동안 약 30여 종의 새롭고 치명적인 전염성 병원체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國務總理 高建 사스도 그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즈, 사스……

○조성준 의원 사스나 에이즈 그 외에도 치명적인 질병들이 많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우리나라 에이즈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國務總理 高建 예, 2250여 명인데 현재 1802명이 생존해 있는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국내 에이즈 감염 환자는 이미 2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분기별로 대비했을 때 4, 5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감염자가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에이즈 환자가운데 행방이 불명된 자가 현재 62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20여 명은 불법체류 외국인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경찰청과 대책을 협의했으나 이에 대한 대답은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하고 이번 국감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동의합니다.

○**조성준 의원**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100만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손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에이즈 대응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총리, 단호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두 가지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잠적 환자를 찾아내서 보건소의 감염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또 감염자들이 진료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이와 같이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해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총리, 전국의 택시 근로자들이 사상 최악의 열악한 조건에 견디다 못해 택시를 대거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82개 업체의 9만 2000대의 택시 적정 운전자는 23만 4000명인데 운전자는 현재 15만 900여 명으로 무려 8만 3300명이 부족해서 35.6%의 운전자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급제와 교대자 없이 하루 18시간 일하는 1인 1차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2교대제의 경우에도 하루 11시간 근무하는 등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추세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일하고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수도권이 대략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 수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택시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를 떠나고 있는 것은 지난 수년간 두 차례의 택시요금 인상과 부가가치세의 경감, 유가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총리,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인상은 사납금 인상으로, 부가세 경감분은 사업주에게로, 유류비는 운전자 부담으로 택

시 운전자 처우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건교부와 노동부에 지시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해 주고 있고,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러고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유류세 추가 인상분 전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추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택시 운전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노동부, 특히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예.

○**조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최대의 노동 현안이 되었습니다. 장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50~75%에 불과하고, 각종 복지혜택 수준이 낮고, 휴일·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와 노동조합의 보호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는 흔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어려운 점은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9월 4일 대통령이 참석한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남용 규제 관련 입법 즉, 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조성준 의원** 왜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논의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법안은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기본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그리고 남용 규제인데요, 특히 남용 규제와 관련해서 이 규제가 노동시장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남용을 나올 가능성 등등 노동시장 및 경제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아직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IMF 과정에서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IMF를 빠른 시일 내에 경이적인 속도로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협조가 없었다면 이러한 경제회복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았습디다. 이 과정에서 생긴 가장 큰 현안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임은 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빨리 논의를 마무리해서 법안을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部長官 權奇洪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준 의원 지난 17일 129일째 45m의 대형 크레인에서 농성 중이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업주의 노조 간부와 근로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로 지난 1월 두산중공업 근로자의 분신 사건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의 자살 사건입니다.

장관, 지난 1월 손해배상 가압류에 항의해 두산중공업 근로자가 분신 자살한 직후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용자가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이런 사실이 있지요?

○노동部長官 權奇洪 예, 그렇습니다.

○조성준 의원 그럼에도 9개월 후에 또다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등에 항의해서 노조 위원장이 자살한 사건은 정부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部長官 權奇洪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에 의해서 개별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저해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률은 노사관계 법에서 규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민사법에서 규율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법사위에도 오세훈 의원님 이하 마흔한 분의 의원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법률개정안을 제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난 6월부터 관련 법률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법리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방향이 나와 있다뿐이지 아직까지 법률개정안까지 마련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조성준 의원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노조의 정당한 또는 불법적인 파업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가압류제도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나요?

○노동部長官 權奇洪 과거 영국 같은 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성준 의원 과거가 언제 시점입니까?

○노동部長官 權奇洪 아주 오래된 옛날을 얘기합니다.

○조성준 의원 아주 오래된 제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용자가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방향만 얘기하신 것입니까?

○노동部長官 權奇洪 제도 개선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처럼 법리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해소되지 못해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인에 대한 손배 가압류의 경우에 지금은 임금채권 경우는 2분의 1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는 데 더해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생계비 수준은 보장하는 방안, 조합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방안,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배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성준 의원 참고로 한진중공업의 경우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에 7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노조간부 20명의 임금 부동산 조합비에 대해 가압류했고, 1명 해고, 178명 징계조치를 취했고, 작년의 임금협상과 단체협약마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적군과 싸우는 정도의 전투적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압박했

다고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무분별하고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반드시 연내에 약속대로 내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동부장관 권奇洪** 손배 가압류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준 의원**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데, 옛날에는 말입니다. 노동부가 나서 가지고 ‘노조가 파업하면 손해배상을 적극 제기해라’ 이렇게 지도했던 암울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절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민주화가 진정으로 정착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산업사회 평화를 위해서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동부장관 권奇洪** 예.

○**조성준 의원** 청년실업 문제가 초미의 현안이 된 가운데 30대 실업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30대 실업자가 19만 1000명으로 30대 실업률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입니다.

30대들은 아직 젊지만 재취업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대기업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고 중소기업도 실무 라인에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많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30대 실업률의 급증은 전례가 없는 기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뭔가요?

○**노동부장관 권奇洪** 우선 30대의 실업률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30대가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0.6% 정도 실업률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전체 실업률 증가율 0.6%하고 마찬가지로입니다.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한다면 30대만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긴 한데, 다만 30대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추 세대마저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다른 구조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는 경기 하강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서 대책 차원에서 전 부처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고, 다만 구조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구조조정 등이 일어날 때 30대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는데 요즘은 30대까지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달라진 점이 라면 달라진 점이겠습니다.

인력관리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가급적 우리 중추 세대인 30대가 구조조정이 설사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전체 실업률을 잡는 과정의 일환으로 30대의 실업률도 같이 잡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준 의원** 50대 고임금자의 구조조정 시기를 지나서 이제 구조조정이 30대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정부 각 부처와 경제부처가 협의해서 이러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병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와 국정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외환위기 이래 경제성장은 최저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들 합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줘야 합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성장과 분배는 경제성장의 양 수레바퀴입니다. 정부는 소외계층과 노동자, 농민에게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통합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닐지라도 700만의 신빈곤층과 모자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여성과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다음은 金洪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春 議員** 한나라당 거제시 金洪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과 장관과 방송의 부당한 간섭과 변호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

호하기 위해서 외롭게 분투하는 검찰 공안부 검사들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관들의 투지와 용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盧武鉉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입니다.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입니다. 공산당이 합법화되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하고, 이적단체 한총련을 격려하고, 인공기 훼손했다고 북측에 사죄하고, 소위 인민민주주의 친북 활동을 한 자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서독 사민당수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실행할 때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는 사민당과 브란트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서독 연방의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의원들을 첩자로 포섭하여 친동독 정책을 펴는 브란트를 불신임 위기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집권 사민당 원내총무 칼 뷔난트도, 브란트의 서류가방을 든 기욤도 동독의 간첩이었습니다.

그때도 서독 지식인 사회에서는 동독 편을 들어야 진보적이라는 논리가 팽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억압과 착취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진보가 시대착오적인 주체사상과 처참한 북한의 현실에는 눈을 감거나 오히려 동조하기조차 합니다.

간첩 송두율을 초청한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그를 민주인사라고 강변하고, KBS 사장과의 이사장은 그의 미화와 입국에 조력하고, 국정원장은 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은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문화관광부장관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간첩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모 대학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에 기여했다면서 명예박사학위까지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첩 송두율에 대하여 생각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고 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단시대의 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보다는 민족 간의 화합과 포용 정신에 따라 관용하자는 취지로 변론연설을 했습니다. 실로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정권은 각계각층과 연대해서 합법적인 신분과 투쟁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간첩 송두율을 기획입국시켰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해 협력과 간첩의 처벌은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독일에서는 통일 후에도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 수뇌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정권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입니다.

盧 대통령은 태풍 한가운데서 ‘인당수 사랑가’를 구경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노사문제, 교육정책, 청년실업 등 국정현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측근’, ‘동업자’, ‘영원한 집사’라고 하는 양길승, 안희정, 최도술 씨 등이 모두 부정비리에 연루됨으로써 소위 참여정부의 생명이라고 하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신임투표로 국민을 협박하는 정권입니다.

국정실패와 부정부패로 지도력을 상실한 盧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자신의 무능과 부패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과 언론에 떠넘기면서 ‘채신임이나, 혼란이나’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자들이 악용해 온 신임투표로써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눈앞이 캄캄했다”라고 말한 것은 비리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헌법에도 없고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신임투표를 강행하는 것도 또한 탄핵사유가 될 것입니다.

경제는 최악인데 1000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면서 가사 “악랄하게 진진하자”는 흉위병들의 도움으로 채신임을 받아 본들 실추된 도덕성과 지도력이 되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盧 대통령이 그의 말대로 대통령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 또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 속에 몰아넣지 말고 구차하게 채신임에 매달리지 말고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애국적이고 개혁적인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盧武鉉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아직도 김철수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했다는 말로 거듭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金洪春 議員** 송두윌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이제는 믿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議員**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찰이 있는데 검찰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장관이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믿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믿지 못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혐의 단계, 피의사건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洪春 議員** 송두윌의 간첩행위와 남북회담을 위해서 왕래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 발언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이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서 적절치 않다는 말을 국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金洪春 議員** 좋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은 송두윌 사건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송두윌과 같은 거물 간첩도 “어서 오십시오” 국비로 초청해서 영웅처럼 환대하고, 직장 주고, 대학에서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강의해서 친북세력을 확산시켜야지, 비판하고 수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발언을 정확하게 말하면 “송두윌 씨 사건이 1주일 넘게 모든 방송과 신문에 머리기사로 다루어야 될 정도의 논란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송두윌 씨 사건 자체가 논란거리조차 되지 않는거나 송두윌 씨를 두둔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거리를 두고 검찰의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취지로 했던 얘기입니다.

○**金洪春 議員** 신문 사설에서는 李滄東 장관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제가 했던 이야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연유로 인한 것이든, 또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무위원

은 질책을 듣고 반성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사과드릴 수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좋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첫째는 북한 핵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이후에 그동안 해묵었던 사회갈등 구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을 해서 국론이 많이 분열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제가 느끼고 있는 중요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議員**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되고 있는 체제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그런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崔洛正 해수부장관을 보름 만에 해임 제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崔洛正 해수부장관은 해수부 출신으로서 최초로 해수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장관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해임건의를 했습니다.

○**金洪春 議員** 본 의원이 보기에 康錦實 법무부장관이나 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도 부족하고 국무위원답지 못한 부적절하고도 경솔한 언동이기에 때문에 “대통령은 오페라 보면 안 되는가” 한 崔洛正 장관보다도 훨씬 국가적으로 해악을 많이 가져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장관에 대해서 마땅히 해임 제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두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총리가 분명히 질책했고, 또 두 분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議員** 康 장관과 李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신임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崔洛正과 달리 감히 해임 제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렇지 않습니다.

○**金洪春 議員** 신임투표는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모든 학자들이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법리상 논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 문제는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밝혔듯이 법리상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행법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金洪春 議員**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하다, 그래서 국민투표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혼란시키기보다는 사임하는 것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사임을 권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없습니다. 저는 현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자청한 재신임 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나라를 위한 또 정국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확신합니다.

○**金洪春 議員** 새 대통령을 선거할 때도 중립내각에서 관리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신임투표를 高建 내각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중립성이 있습니까? 마땅히 총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우선 첫째, 만일 제가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별도의 중립내각을 요청하신다고 그러면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데 합의해 주시는, 그 두 가지 전제 위에서라면 저는 중립내각의 구성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총리는 盧 대통령이 최도술 비리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 영장 신청한 그 내용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金洪春 議員** 총리도 그 진상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신임투표 가부를 하라고 강요하는 이것이 대국민 협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고 또 기자회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임투표 시기를 12월 15일 전후로 예정하면서 대통령께서 설명한 것은 그 안에 측근 최도술 씨의 비리사건

이 전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12월 15일 전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그렇다면 검찰에서, 또 미흡하면 국정조사에서, 또는 특검에서 盧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확실히 밝혀진 뒤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견해는 같이하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절차는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議員**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부를 투표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과정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결과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金洪春 議員** 다음에 법무부장관은 법상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에 대한 법령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金洪春 議員** 송두율 입국, 특별검사법의 거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토지 공개념의 강화, 국민투표 제안 등 이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대통령께서 직접 자문 요청은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의 고유업무이므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대통령이 자문하지 않는, 자문할 필요가 없는 법무부장관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내각의 장식품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자문의 절차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金洪春 議員** 장관은 자문받은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직접 자문을 구하신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당연히 고유업무로서 검토하고 적절한 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총리에 대해서도, 내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견제하는 직책입니다.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코드를 맞추어서 법무부장관이 예스 장관으로 전략하면 짚맛을 잃은 소금이 될 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명심하겠습니다.

○金洪春 議員 장관은 12월 인권주간에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서 감방체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감옥체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감방에 들어가 앉아 있어 보지 아니하면 수감자의 고통을 모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런 취지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주력하고 있는 교화행정의 개선과 관련해서 재소자의 인권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고시키는, 인권주간에 부합한 행사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洪春 議員 장관 취임 후에 몇 차례나 특강에 나갔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특강은 여성단체 쪽 두 번,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그 정도입니다.

○金洪春 議員 盧武鉉 정권에는 장관은 없고 특강장사만 있다 이런 야유의 소리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처음 듣습니다.

○金洪春 議員 등하불명입니다. 간첩이 날뛰고, 군수가 시위대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청와대 핵심들이 줄줄이 잡혀 오고, 기업인과 정치인들 수사가 연일 계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특강이나 다니고 교도소 감방에 앉아서 사진 찍을 정도로 한가하다고 생각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특강 자주 간 적 없습니다.

○金洪春 議員 康 장관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기심과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개인적 의견이 없습니다.

○金洪春 議員 한 마디 고언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죄송하지만, 튀는 발언을 예사로 하고 인기 관리하는 듯한 그런 법무부장관을 원치 않습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인기 관리한 적 없습니다.

○金洪春 議員 본 의원은 康 장관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의연하고 믿음직한 그런 법무부장관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의원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마는, 제가 인기 관리를 하거나 특강에 주력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처럼 전제하시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金洪春 議員 교도소에 들어가서……

○法務部長官 康錦實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은 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金洪春 議員 여성장관이 감방에 들어가서 사진 찍히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法務部長官 康錦實 저 혼자 갈 것도 아니고 인권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권 프로그램입니다.

(趙富英 부의장, 朴寬用 의장과 사회교대)

○金洪春 議員 인권위원장하고 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국이나…… 현지시찰 가서 얼마든지 둘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거기 들어앉아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장관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감옥 체험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金洪春 議員 관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본업의 일환입니다.

○金洪春 議員 대통령이 “나에게 원칙과 법을 강요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법무부장관은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명심하겠습니다.

○金洪春 議員 자유민주주의와 소위 인민민주주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체제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소위 인민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金洪春 議員 인민민주주의를 법무부장관이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관심을 가질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議員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는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저의 고유업무입니다.

○金洪春 議員 송두울 죄명이 무엇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국가보안법 중에 어떤 규정 위반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어제 영장청구 발부된 것을 아직 보고 못 받아서 구체적인 조문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반국가단체 가입·활동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그 법정형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정확한 조문과 범죄사실이 나와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중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장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송두울의 정확한 죄명과 적용 법조문을 모르면 됩니까? 이것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장관이 정치적인 자리라고 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교도소에 가서 감방을 보기 전에 이런 데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洪春 議員 소위 인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투쟁해 온 간첩 송두울도 민주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洪春 議員 생각하지 않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金洪春 議員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민주인사라고 강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간첩을 민주인사라고 합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 없습니다.

○金洪春 議員 신문도 안 보십니까? 밑에 검찰국으로부터 보고도 안 받습니까?

간첩이 전향할 의사도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했

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洪春 議員 아니, 나는 범죄사실을 물은 것이 아니고, 간첩이 대한민국에 전향도 안 하고 뭐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간첩질하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식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議員 장관은 법사위원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 같다”,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그런 말을 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고 제가 거듭 사과드렸습니다.

○金洪春 議員 그러니까 계속 장관이 사과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간첩을 두둔하고 변론하는, 검찰에 간섭하는 그런 발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金洪春 議員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변호를 했잖아요. 원고에도 없는 변론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변론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金洪春 議員 속기록 한번 자세히 읽어 보세요. “포용하자”고 했습니다. 포용은 관용입니다. 대통령이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라고 해석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색깔공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議員 간첩 송두울을 구속하는 것이, 구속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엄벌해야 된다는 것이 색깔공세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말뜻은 지금 하시는 말뜻이 색깔공세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사법처

리와 관용의 정신 두 가지 다 고려하면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議員**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을 만나면 법무부장관이 일일이 해명해야 될 정도의 이상한 발언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충고하세요. 그것이 법무부장관다운 역할입니다.

대통령은 “검찰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장관도 법원에다가 검찰 견제를 주문했는데 대통령과 장관은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으로 얼마든지 검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데 마치 야당 탄압하듯이, 대결하듯이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무슨 해괴한 작태입니까?

장관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호해야 하는 방과제 역할입니다. 왜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추어서 자꾸 검찰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답변하세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검찰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金洪春 議員** 5월 7일 간담회에서 “검찰의 적절한 수사권 행사를 위해서 법원이 제 기능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검찰 견제를 요청했어요.

장관은 러시아에 가서 깜짝 놀랄 인사를 내년 봄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金洪春 議員** 도하 전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金洪春 議員** 언론에서 그렇게 쓸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이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냥 텅없이 작문한 것입니까?

장관은 서열파괴가 바로 개혁적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지 않습니다.

○**金洪春 議員** 그렇지 않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金洪春 議員** 대통령은 법조서열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열파괴가 개혁적이라면 장군 제치고 영관급 장교로서 참모총장 임명하면 깜짝 놀랄 개혁적 인사가 되겠지요? 그런 인사 적절치 않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전체적인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나 저의 발언의 정치적인 맥락과 정책적인 취지를 이해하면서 그 부분에서의 적정한 비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기사화된, 실제로 발언하지 않은 것이 다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사화된 결과만을 갖고, 문장 하나만을 갖고서 전체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정책이나 신조나 이런 것들이 비판받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洪春 議員** 비판이 적절치 않으면 발언도 적절하게 하세요. 그렇게 오해의 기사가 나올 발언을 하지 마세요.

초대 법무부장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지금 얼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金洪春 議員** 초대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지금 얼른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金洪春 議員** 은고이지신입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 **李仁** 법무부장관, 초대 검찰총장 **權承烈** 총장은 **李承晚** 박사께서 독립동지인 임영신 씨를 수사하라 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심기를 그르쳤지만 **權承烈** 총장을 2대 법무부장관으로 이 박사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임명했습니다.

장관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議長 朴寬用** 다음은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의원** 국민참여통합신당 소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출신 천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대통령께서 재신임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축적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을 걸만큼 지금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오랜 고뇌와 충정 끝에 제안하신 재신임 문제가 더 이상 정략적인 왜곡 없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에게 촉구합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대통령 직을 흔드는 정략적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은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재신임 문제를 입장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직후에 즉각적으로 환영하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던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입니다. 재신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재빠르게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른바 ‘선 진상규명, 후 재신임’을 당론으로 내걸어 마치 盧武鉉 대통령이 심각한 비리나 있는 듯이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으로 조성된 재신임 국면은 어느덧 정치공방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계속 지체된다면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은 계속 증폭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게 요구합니다. 재신임 국민투표 시행 여부에 대해서 가부간에 즉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 한나라당의 金洪春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를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통성마저 부인하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의 흉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서 준엄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자성을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전체가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국민 앞에 과연 떳떳하게 존립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철저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주도한 안풍사건, 세풍사건,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K 비자금 사건은 때로는 국가권력까지 동원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강제로 조달하고 막대한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한 정치비리의 전형입니다.

이런 불법 비리를 바탕으로 현재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법 비리가 한나라당의 존립근거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불법 비리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이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 몇 사람이 총선을 통과해서 앉아 있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안기부 예산을 횡령하여 총선 당시 200여 명의 자기 당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안풍사건에 관해서 지난 9월 23일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풍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K 비자금사건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의 재정위원장으로 대선자금의 모금과 관리를 총괄했던 崔燾雄 의원이 SK그룹에 요구를 해서 100억 원의 자금을 전액 현찰로 불법적으로 받아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 돈 중 상당 부분을 한나라당이 불법 대선자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崔秉烈 대표께서도 바로 오늘 아침에 사실상 시인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100억 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천정배 의원**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이 돈을 한나라당 崔燾雄 의원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또는 한나라당의 사조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으로 들어가서 쓰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점도 아직 안 밝혀졌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사용처에 관해서 수사가 어제 오늘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 좋습니다.

SK로부터 100억 원을 받을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미래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SK그룹에서만 빚어졌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빙산의 일각이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SK그룹

이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도 이런 불법적인 거액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법무부장은 수사를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수사의 필요성이나 확대 여부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지만 법무부나 검찰의 원칙은 비리자금 수사에 어떠한 성역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정배 의원** 앞으로 한나라당 공·사조직의 선거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진정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서라도 안기부 자금 등 1000억 원에 가까운 국고 횡령금을 당시 선거자금으로 받은 의원들과 연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또 기업으로부터 받아 온 불법자금도 역시 기업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무조건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속 국회의원들을 집단적으로 검찰에 보내서 정치적 압력을 가한 바도 있습니다.

장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자신들의 불법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을 찾아가고 압력을 넣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보고에 따르면 10월 15일, 10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한나라당 의원님 몇 분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중수부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燾雄 의원의 변호인 자격이었다고는 하지만 외형상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반복이 안 되게끔 법무부장관으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지금 법무부장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 주어야 될 책임이 있으시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습니다.

○**천정배 의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法務部長官 康錦實**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 한나라당이 법무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검사나 검찰총장 누구든 찾아가게 하는 것은 법무부장이 차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의방문 경과에 대해서 사후에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천정배 의원** 앞으로 검찰에 정치권 사람들이 자기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절대로 만나지 말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취임 후 3~4월에 이미 외부에서 어떤 수사와 관련한 의견전달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무부장관에게 오도록 하라고, 검찰을 예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지금 안기부자금 횡령액에 대한 민사청구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 청구액이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해서 900억이 넘습니다.

이 사건이 약 2년쯤 지났고 이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난 만큼…… 또 한나라당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을 도피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한나라당의 재산, 부동산만도 1250억이라고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했습시다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즉시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뿐만 아니라 이 민사소송사건이 형사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사건 판결이 한 달 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민사재판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진행시킬 대책이 무엇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재판부에서 형사사건과의 관련 때문에 추정이 오래되었고, 지금은 기일 지정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심판결, 2심판결이 사실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정할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사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증거이지 형사판결의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바로 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그래서 1심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는 바로 법원에 기일지정을 촉구한다든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천정배 의원** 한나라당이 안기부자금을 가져간 것은, 이미 국고에서 1000억에 이르는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선거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가에서 나오는 정당에 대한 또는 선거 때 나오는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앞으로 국가가 한나라당에 지급해야 될 국고보조금을 횡령에 대한 보전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미처 생각은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올해 4/4분기에 30억 정도가 나오는 모양이고 내년 1/4분기에도 30여억 원, 내년 총선에 한 100억쯤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상계 처리하더라도 안기부자금 횡령액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5~6년간 더 상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스스로 재산을 매각해서 갚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정치라든가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이런 과제는 한나라당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대선자금이든 총선자금이든, 선거자금이든 아닌든 또 그 모금 주체가 중앙당이든 지구당이든

개별 정치인이든 막론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성역도 인정하지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강력하게 색출 처벌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지시하고 소신껏 수사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정치권은 그동안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데 대해서 모두 고해성사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정당의 정치자금과 개별 정치인이 받는 정치자금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성·지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이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제가 질문을 좀 놓쳤습니다.

○**천정배 의원** 정치개혁, 특히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 관행을 청산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저는 정경유착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입안이 되어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참고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본방향은 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철저히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공영제에 가깝도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정부도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정치권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제도개선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책임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말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자금을 주고 받는 것을 경찰이라든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실제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이미 총선과 자치단체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를 위한 단속대책을 세워서 지금 세부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이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 참여의 시대를 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권위주의에서 탈피하고 또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등의 의미 있는 성과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은 개혁 과정에서 낡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새롭게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가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짧은 기간 안에 급격히 떨어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줄거리로 보아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새 정부 출범 초에 어느 정권보다도 대내외적인 최악의 국정환경 조건하에서 출범했다는 점, 둘째는 해묵었던 사회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했다는 점, 셋째는 역시 경제회복이 지연되어서 지금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세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는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

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주 2회 열면서 5월부터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갈등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 가면서 결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특히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참여와 통합에 의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국정안정의 일곱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정부가 가장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께서도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불안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민생불안이 우리 경제가 당장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역사적 구조적 현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민생불안은 일시적인 것임과 동시에 매우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경제나 민생 문제에 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을 하고 관성적인 정책 집행에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좀 비판하자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는 경제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경제정책 방향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및 민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현재의 경제현황을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경기순환적인 경기불황,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복합적으로 지금 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산업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데 따른 구조적인 어려움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가 바로 구조적인 실업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조기에 집행한다든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당면 경기대책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해서 여기에 R&D라든지 집중 투자를 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동북아 물류를 비롯한 동북아경제중심사업이라든지 또 노사개혁, 기업 구조개혁, 지역균형발전,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기본과제를 설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정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87년 이후 선출된 대통령 중에서 국민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입니다. 가장 높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고 끈뭇하게 지속적인 개혁을 해 나가면 틀림없이 국운이 융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예,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감사합니다.

.....

○議長 朴寬用 洪準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洪準杓 議員 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당 崔燉雄 의원의 SK비자금 연루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드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혁명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 대선자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盧武鉉 후보 대선자금의 불법성이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 돈, 호텔업자 돈, 서민들을 사기 친 돈, 재벌 돈으로 얼룩진 盧武鉉 후보 불법 대선자금도 검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아울러 崔燉雄 의원 사건이 재신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국 전환용으로 사용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여론조사 기관 갤럽회장 최시중 씨는 盧武鉉 정권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이는 해야해야 할 국면이라고 진단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4년 뒤 캄보디아 같은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내일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盧武鉉 정권의 지지율은 16.5%에 불과하여 취임 초보다 무려 70%나 지지율이 폭락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盧武鉉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빨리 해야해야 할 국면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盧武鉉 정권의 탄생 배경에는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한마디로 음해공작과 사기극이 난무했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치러졌습니다.

병역비리 공작, 20만 불 공작, 기양건설 비자금 공작, 대북송금 은폐 공작에 희망되지 사기극까지 보태어져서 지난 대선은 총체적으로 국민들을 기망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둘째, 미검중인 상태로 당선된 盧武鉉 대통령에 대하여 당선 후에 검증을 해 보니 盧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바와는 달리 온갖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비도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자신을 만들어 준 모태조차도 부인하는 코드분할정치로 국민분열에 앞장선 결과 국민정서가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넷째, 민생 경제 안보는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신당 만들기에 열중한 결과, 현재 우리는 IMF 이후에 최악의 경제난 실업난으로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수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격에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한 언행과 행적으로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대통령의 신임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의 에스트라다를 닮아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만 국정혼란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생각이 없는지, 하야를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는 측근 비리에 대

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신임을 묻기로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재신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洪準杓 議員** 재신임 정국이 촉발된 것이 최도술 비리거든요. 최도술 비리를 두고 대통령은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또 모른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도술 비리가 어떤 내용이라고 총리는 생각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알기에는 영장에 기재된 11억……

○**洪準杓 議員** 대통령이 11억 가지고 눈앞이 캄캄했을까요?

○**國務總理 高建** 오랫동안 측근에서 보좌해 오던 최도술 씨의 비리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인간적인 책임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洪準杓 議員** 2000년 총선 때 대통령은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11억이 훨씬 더 되는 돈이거든요. 그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11억 가지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겠습니까? 2000년 총선 때는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 봤다고 했어요.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11억 가지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국정의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측근이 비리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洪準杓 議員** 총리, 이번은 측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총선 때는 본인 문제입니다. 본인 문제에 눈도 깜짝 안 했는데 이번 최도술 비리에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나도 일부 알고 있다, 그런데 눈앞이 캄캄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11억 때문이었을까요?

○**國務總理 高建**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洪準杓 議員** 그것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신임투표한다고 했는데 왜 신임투표를 12월 15일에 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만일 불신임될 경우에는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 대선을 4월에 있을 총선과 병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로부터 역산해서 대통령의 권위가 허용되어 있는 기간이 헌법에는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洪準杓 議員** 불신임되면 당장 물러나야지요. 두 달 동안 더 청와대에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임되면 당장 물러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러면 2월경에……

○**洪準杓 議員** 공백이 없으려면 2월 말경에 신임투표를 해야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러면 2월 말경까지의 재신임 정국을 불안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洪準杓 議員** 그러면 대통령이 1월경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왜 설불리 10월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임되면 물러나셔야지요. 제대로 투표를 하려면 2월 말에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기간이 딱 맞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洪準杓 議員** 만약에 2월 말에 신임투표를 하자고 주장이 되면 그것을 수용하시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정치권이 협의해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라서 관리하겠습니다.

○**洪準杓 議員**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盧 대통령의 지지율이 16.5%에 불과한데 재신임 여부에서 신임이 4, 50%가 나오고 있는 배경은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정국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심정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洪準杓 議員** 그러니까 안정을 바라는 것을 역이용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신임을 묻는 것입니다.

○**洪準杓 議員**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방식처럼 대안제시형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2월 말에 하되 대안제시형으로 하면 이런 파행적인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국민들이 대안이 보여서 야 3당들이 국민후보를 내세우게 되면 이런 파행적인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러한 제도도 정치권에서 대안으로서 협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洪準杓 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법만

개정하면 간단합니다.

○國務總理 高建 정치권에서 협의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洪準杓 議員 총리가 백심 있게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께서는 상당히 신망도 있고 훌륭한 분이죠. 좀 백심 있게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國務總理 高建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洪準杓 議員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현 각료 중에 가장 솔직하고 당찬 인물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부적합한 언행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언행을 안 하신다고 했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습니다.

○洪準杓 議員 장관의 답변 태도를 첫날부터 죽 지켜보니까 “모른다”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은 이야기할 수 없다” 심지어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느 스포츠지에 나온 것을 보면 장관 답변이 허무개그식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수사 중이다, 답변을 못 한다, 장관의 이런 태도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 질문이나 정책질문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감·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盧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한 계기가 된 사건이 최도술 사건인데 장관이 그 사건을 보고받은 것이 9월 중순이라고 했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습니다.

○洪準杓 議員 장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9월 중순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맞습니다.

○洪準杓 議員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제1항제11호와 제8조를 보면 검찰에서는 중요사건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2과를 통해서 받잖아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다른 의원께서는 내사 중인 사건은 보고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洪準杓 議員 아니, 내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

○法務部長官 康錦實 내사 중인 상황이었습니까.

○洪準杓 議員 정보 보고를 하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내사 중인 사건입니다.

○洪準杓 議員 내사 중인 사건은, 보고사무규칙에서는 구체화된 사건이고……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구체화된……

○洪準杓 議員 장관은 묻고 난 뒤에 답변을 해야지요. 아까도 자꾸 말 중간에 묻는 사람의 말을 끊어서 답변하면 안 되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洪準杓 議員 보고사무규칙은 사건에 관한 보고사무규칙이고 8조에 가면 정보보고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사 중인 사건, 검찰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2과를 통해 보고를 다 받는데 그러면 9월 중순에 보고받았다면 내용은 뭘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9월 중순의 보고는 제가 대통령께 한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입니다.

○洪準杓 議員 그러면 최도술 사건을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전에 두 번 있었습니다만, 분명하게 지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洪準杓 議員 그 훨씬 이전에 받았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출국문제가……

○洪準杓 議員 그것은 9월 3일이고 그 이전에는 언제 받았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무렵이었던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洪準杓 議員 출국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최도술 사건 보고는 받았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洪準杓 議員 출국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입니까, 발생하고 난 뒤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이상 지금 기억을 더듬기는 어렵습니다.

○洪準杓 議員 장관, 저도 검사를 해 봤거든요.

다 검찰2과로 보고합니다.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려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고받은 내용이 뭐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정도입니다.

○**洪準杓 議員** 구체적인 혐의는 이야기 안 하고?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0월 3일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準杓 議員** 좋습니다.

원래 SK사건이 2월 19일 서울지검 형사9부에서 최종현 전 회장 자택인 삼청동 선혜원을 압수 수색할 때 비자금을 이미 그 당시에 다 확보했습니다. 이 비자금 장부 은닉처를 알려준 사람은 손길승 SK 회장의 측근들입니다. 자기들 세력 싸움으로 이 사건이 터졌어요. 최태원이 우선 들어가고 난 뒤에 최태원 씨 측의 반격으로 이 사건이 또 터졌어요.

검찰에서는 이미 지난 5월에 SK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었어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에서 조사하고 난 뒤에 이 자료가 몽땅 대검 중수부로 넘어갔어요. 나는 장관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고리는 최도술이 아니고 이영노입니다.

옛날에 변인호라고 징역 15년 선고받고 사기범으로 미국에 도피한 희대의 사기범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대구상호신용금고 사건으로 등쳐먹은 일이 있습니다.

이영노라는 사람은 盧武鉉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영노가 국제종합토건 회장 김성철-부산상공회의소 의장입니다-의 주도로 부산의 건설업체 B건설, D건설에 관급공사를 따 주겠다고 대선 이후 12월부터 2월경까지 부산 부전동 소재 대림빌딩 최도술 사무실에서 이영노를 통해 최도술이 받아 간 돈이 300억가량이예요.

받은 명목은 DJ정권 때 중견 건설업체들이 다 부도가 난 뒤에 호남 건설업체가 대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관급공사를 거의 다 도리를 했어요. 이 전례대로 이 건설업체하고 일부 철강회사들이 관급공사를 노리고 돈을 모아 주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해 주지 못 했느냐? 2001년 1월부터 조달청 입찰방식이 전자입찰로 바뀌니

다. 옛날같이 권력층에서 임의로 입찰을 다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순경에 돈은 걷어 가고 액션이 없으니까 김성철을 비롯한 부산 상공인들이 청와대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문재인 수석을 방문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하고 검찰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영노는 최도술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직전에 갑자기 증폭으로 말 못한다고 입원해 버려 수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과정에서 지난 5월경 검찰 고위간부와 이영노 간에 핸드폰 통화를 계속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입니다. 이영노가 증폭으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최도술 사건은 SK비자금 11억 사건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눈이 캄캄하다고 했다는 사건은 SK비자금 사건이 아니라 부산 건설업자들이 관급공사를 노리고 최도술에게 넘겨준 이영노의 300억 원입니다. 최도술이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이 돈을 물론 사적으로 썼을 수도 있지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확인해 보고, 그래서 최도술이를 8월 17일에 총무비서관에서 사직시켜 버렸습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관급공사를 계속 안 주고 부산 경제가 계속 나빠지니까 9월 중순에 다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인 김성철이 주도해서 청와대를 방문하는데, 이것은 무마방문입니다.

부산 경제를 어떤 식으로 살려 줄 테니까 최도술 사건을 덮자, 이영노 사건을 덮자, 9월 22일경인가 9월 중순 넘어 하순경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인 김성철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청와대 방문을 다시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최도술이 아니고 이영노 게이트입니다. 나는 검찰이 이것을 진작 확인하고도 왜 수사를 미적거렸는지, 장관께 들으셨냐고 물으면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엄격히 수사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을 통해서 지시할 수 있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홍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보내 주신다면 수사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洪準杓 議員** 장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보

면 ‘검사는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압수하고 수색하고 수사를 해야지 어떻게 일반인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지금 그 부분은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의혹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準杓 議員 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면 검사가 뛰어 들어서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95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法務部長官 康錦實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洪準杓 議員 의혹이 많은 게 아니라 이영노 게이트는 간단한 겁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의혹 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사들도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洪準杓 議員 그것은 속기록을 보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대선자금의 용처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 조사하면서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안희정 사건, 염동연 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었고, 이상수 의원 SK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었고, 정대철 대표 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선자금을 조사한다면 야당만 부각시키고 盧武鉉 후보의 대선자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키스 나이트의 폭력배 사장 돈 50억, 썬앤문 문병욱 회장 95억 원, 여기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盧武鉉 정치자금 저번에 95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하윤택의 진술입니다. 서울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 안 합니다. 거기다가 7월 11일 정대철 의원이 200억 수수 발언을 했습니다. 7월 11일 다시 한번 돌려 보십시오.

盧武鉉 대선자금 200억 수수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문희상 실장하고 유인태 수석이 깜짝 놀라서 정대철 씨하고 무마하는 회동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자료를 보십시오.

이런 것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고 지금 야당만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당 잘못했

지요.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하면 공정히 수사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정히 수사를 할 용의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洪準杓 議員 장관님, 하나 유의할 것은 SK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수 의원께서는 지난 2월에 서울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한 일이 있고, 盧武鉉 대통령도 이와 관해서 수사 속도 조절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SK 돈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洪準杓 議員 정치권의 비자금 때문에 참으로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자금 모두 밝히고 대통령이 관련되었으면 대통령에 관한 문제도 탄핵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도 전부 다 밝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朴寬用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副議長 金台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鎭碩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연기 출신 鄭鎭碩 의원입니다.

모두발언 이후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탄

식이 절로 나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실업자 숫자가 52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실업률이 마침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대합실에는 새우잠을 청하는 청년 노숙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기업도 장래가 막막하다며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교육비의 총규모가 17조 6000억 원, 망국적 과외비가 매년 조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의 총규모가 그해 전체 교육예산과 맞먹습니다. 일선교사의 60%가 그 자녀들도 과외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의 현실은 더욱더 기막힙니다. 등골이 휘도록 1년 농사를 지어 봐야 생산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라고 얘기해도 통할 리가 없습니다.

경제추락, 민생파탄의 일차적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재신임을 물어도 삼신임을 물어도 정치 리더십의 실종이 초래한 혼돈과 국정난맥의 실효적 치유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혼란의 책임을 절감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시기 바랍니다. 제발 실정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국정 최고 책임자다운 대인적 풍모를 국민 앞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그 자체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절대 찬성입니다.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첫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는 문제일 것입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정상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편 가르기 코드 편향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 국가경쟁을 위한 인재들을 모아서 실사구시의 정치, 대통합의 정치를 선보여 주십시오.

영국의 BBC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대표적 공영방송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토니 블레어 수상을 비롯한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본연의 사명, 정치권력과 최고 정치 책임자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독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방송인 KBS는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KBS가 盧武鉉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던지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시청한 바가 없습니다. KBS는 오로지 盧武鉉 대통령과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감시·감독하는 신문을 향해서만 비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과 애국시민들과 힘을 합해서 KBS를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제자리를 찾게 만들 것입니다.

2만 달러 시대가 저절로 올 리는 만무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선진국형 분권국가로 가는 기초공사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고 그 설계도면의 중심에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쉽게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합니다. 국토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이 방대한 대역사는 범국민적 확신이 그 기초토양이 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노력에 소홀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민들과 정치권을 직접 설득해서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의 회기 내 통과를 비롯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오전 답변에서 정치권에서 합의가 있을 때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중립내각 구성 건의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신임 투표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국가 안위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신임 문제도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의 범주에 넣어서 해석하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만 있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할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권자는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린 이후에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견해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의 뜻은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법리상의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적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법률적으로 잘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鄭鎮碩 議員 좋습니다.

국정 표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도 오전 답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시다만, 상당히 절박한 상황인식을 총리께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매우 솔직한 자기 고백을 지금 대정부 질문·답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정책 혼선이 되풀이될수록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불안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청와대 보좌진들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개인 의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시민단체 본부도 아니고 총학생회 본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국정운영의 기틀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벌써부터 이러니까 정권 말기에나 볼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청와대의 누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어떤 직책에 있는 분이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청와대 공인의 자세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鄭鎮碩 議員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놓고 비서들은 말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구태여 말을 한다면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NSC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취지의 발언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뜻과 정부 결정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측근 보좌진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그것은 보도만 보았지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鄭鎮碩 議員 정책 혼선이 청와대 보좌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시다마는, 지금 외국인 병원에 내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외국의료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필수조건인데 이러한 방침을 번복하는 “담배부담금을 안 올려주면 인천 경제특구 병원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라는 뜻밖의 발언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장관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고 또 한미투자협정체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李滄東 문광부장관은 “스크린쿼터 제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관직을 사임하겠다”…… 총리께서 정책 조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신데 자꾸 이런 정부 내의 정책 혼선, 이런 것이 빈발하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러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면서 1주일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열어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또는 보좌관들, 비서실장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서 총리 주재하에 일관된 원칙에 입각해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열정이랄까 그런 것이 너무 한쪽으로 강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鄭鎮碩 議員 총리께서 오전 답변에서 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조각 수준의 전체적인 내각 개편을 대통령께 건의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지금 국정 표류가 극에 달해 있고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데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총체적인 국정의 난맥상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새로이 심기일전해서 새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전면적인 내각 개편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정수행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재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재신임 국민투표 절차를 협의하시면서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저는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재신임 절차를 신속하게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신다는 그 두 가지를 담보해 주시는 전제 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각의 전면 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鄭鎮碩 議員** 좋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언만 했을 뿐 그 이후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매우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범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되기가 매우 힘겨운 국책사업인데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좀더 솔선수범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금년 정기 국회 회기 중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현행 법령만 가지고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신행정수도추진특별법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제정이 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 작업, 추진 작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단계가 되면 이 특별조치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鄭鎮碩 議員** 총리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특별법의 이번 회기 내 통과와 무관하게 기존 법령만 가지고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차질 없이는 아닙니다. 현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는 특별한 법이 없더라도 준비작업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고 일단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조치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鄭鎮碩 議員**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특별법이 금년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간에 도중하차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國務總理 高建** 그렇습니다.

○**鄭鎮碩 議員**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송두울 씨 건에 대한 처리를 언급하시면서 이른바 포용과 화해, 관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관용과 포용, 선처를 베풀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송감호소에 가면 몇천 원씩 수차례 돈을 흠치다가 적발되어서 몇 년째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른바 법이 베풀 포용과 관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장발장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송두울 같은 반국가 사범에게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 말미에 말씀하신 취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송두울 씨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송두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 논쟁이 격화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원숙한 사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鄭鎮碩 議員** 대다수 국민들과 언론은 우리 법무부장관의 관련 발언과 대통령의 시정연설 말미 발언과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송두울 씨의 처리에 관한 선처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그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총리의 시각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아무리 KBS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도 KBS는 마이동풍입니다. KBS는 지금 국

민들의 혈세로,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 간방송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 일보 보기 싫으면 대문 앞에 신문사절이라고 써 붙이고 구독료 안 내면 됩니다. KBS 아무리 보 기 싫어도 시청료를 안 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전기료에 묶어 가지고 통합공과금으로 강제징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의 편향·편파 보도로 인해서 많은 국민 들이 지금 시청료 거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KBS가 공영방송이기는 합니 다마는, 편집과 방송의 독립성이 인정이 되어 있 기 때문에 그 보도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鎭碩 議員 한 가지 좀 여쭙 볼게요.

저는 KBS가 盧武鉉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총리 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가끔 느낍니다. 이것은 비판적인 것이다……

○鄭鎭碩 議員 盧武鉉 대통령을 KBS가 신문이 직접 비판하듯이 그렇게 비판합니까?

○國務總理 高建 비판의 방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비판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鄭鎭碩 議員 좋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9월 초 쯤에 盧武鉉 대통령에게 최도술 씨 불법자금 수수 의혹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 셧다가 정정하신 바 있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鄭鎭碩 議員 정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9월 중순입니다.

○鄭鎭碩 議員 9월 중순이 정확한 시점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鄭鎭碩 議員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 인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시점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은 언뜻 이해 하기 힘든데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진짜로 기억을 못 했습니 다. 왜냐하면 엇그제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

○鄭鎭碩 議員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 점은 9월 중순인데 장관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

은 첫 시점은 언제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이전입니다.

○鄭鎭碩 議員 그 이전이면 한참 전 시점입니 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그것도 기억을 잘……

○鄭鎭碩 議員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SK 수사가 착수되었을 무렵에 SK가 가지고 있 는 모든 장부를 거의 빠짐없이 압수를 해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SK 비자금에 관 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최도술 씨 불법자금 수수사건 수사의 착수점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는데 SK 수사가 처음 시작된 것이 1월, 2월경 아닙니까? 그때 이미 검찰은 최 도술 씨와 관련된 비자금 수수에 대한 인지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합니다만, 따라서 장관께 서도 검찰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첫 보고받은 시점은 매우 오래 전일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을 합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당시는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

○鄭鎭碩 議員 취임 이후에는 전혀 보고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습니다.

○鄭鎭碩 議員 취임 이후에 아마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직보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지 않았습니다.

○鄭鎭碩 議員 좋습니다.

최도술 씨가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9월 3 일 러시아로 출국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체지를 당하자 전화 한 통화를 하고 나서 곧바로 20분 만에 출국금지가 해제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20분은 아니고 1시간 30 분……

○鄭鎭碩 議員 그렇습니까? 최도술 씨가 무슨 도술을 부린 것입니까? 어떻게 출국금지당한 사 람이 한 시간 만에 출국금지가 전화 한 통화만으 로 해소되어서 출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 었고 출입국 담당 직원이 전화를 했기 때문 에……

○鄭鎭碩 議員 출국금지를 시킨 것은 검찰이 수 사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출국금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鄭鎭碩 議員 그렇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鄭鎮碩 議員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출국금지가 해제됐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술을 부린 것 이외에는 달리 납득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원칙적으로 출국금지를 하지만 재판 중일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출국금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鄭鎮碩 議員 좋습니다.

대통령 측근에게, 이 정권 핵심부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건넨 기업이 SK 하나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순위 3위인 SK가 얼마 규모의 비자금을 건넸다면 다른 기업들도 그에 못지않게 불법적으로 정치권력에, 또 정권 핵심부에 자금을 건넬 것이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SK 이외에는 수사를 확대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장관께서도 같은 생각입니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일부러 확대하거나 일부러 확대 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있는 그대로 가능하다면 전방위적 사정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鄭鎮碩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元裕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裕哲 議員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평택 출신 元裕哲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보혁 갈등, 노사분규, 사고육비 지출 세계 1위, 청년실업, 이민탈출, 가족 동반 자살, 사오정·오륙도로 지칭되는 퇴출실업, 끝이 안 보이는 불황 터널, 부동산 값 폭등과 같은 국가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 정부는 편 가르기 인사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급기야 위기를 더욱 조장하여 국면을 반전시켜 보려는 엉뚱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측근의 비리로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지자 느닷없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정운영을 마치 도박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출범한 지 1년도 안된 채 국가를 공황상태로 빠뜨린 적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펼쳐놓은 이 뻔뻔한 도박판 앞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발 뺀고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슬로건으로 내세운 ‘새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무너지는 대한민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으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책임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막중하고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어느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평생의 공직생활 중 이번처럼 어렵고 복잡한 적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6·29 직후와 비교될 만큼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고 토로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元裕哲 議員 그렇다면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현재의 상황을 두 달 전 상황하고 비교하시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새 정부 출범 6개월 때에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새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최악의 국정환경 조건하에서 출범을 했는데 출범 초에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는 사회갈등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런 과정을 토로를 하면서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출범 초기에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시스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22일 이후부터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여기서 노사분규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갈등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현재

는 노사분규를 포함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진정 내지는 안정 국면에 진입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은 경제는 계속 어렵다는 사실이고요, 특히 지금 달라진 것은 SK 비자금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통령의 재신임 정국이 겹쳤다는 점이 다르겠습니다.

○**元裕哲 議員** 그리고 대통령은 재신임 기자회견 다음날 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총리께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급박히 해결해야 할 국정난제들을 제쳐놓고 원고에도 없던 송두율 씨 선처나 주문하는 등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언론과 야당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측근의 비리로 인해서 새 정부의 도덕성에 훼손을 입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元裕哲 議員**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위기는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오늘의 위기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가 태생적으로 출범 초부터 안고 출발한 여러 가지 최악의 국정환경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출범 초부터 해묵은 사회갈등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해서 어려워졌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경제가 계속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신임 정국이 겹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元裕哲 議員** 정부 출범이 불과 8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재신임 정국이 되었으면 위기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라는 표현은 저는 신중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元裕哲 議員** 본 의원은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

합니다.

더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현실 인식을 잘못해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바로잡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래서 재신임 정국 상황으로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元裕哲 議員**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 간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또 송두율 파문, 새만금 사업, 부안군 위도 문제, 노사분규 같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를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만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통합이 요구되는 이때에 대통령은 느닷없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할 때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이 안정되고 또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지,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이 정치적 합의를 해 주시면 재신임 투표를 시행하면서 우선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경우에는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받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쇄신해서 새로운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元裕哲 議員**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신임이 다 뭐다 해서 더 이상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지금까지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간 데 대한 책임도 지시고 또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하시고 차라리 조용히 그만두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지역갈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장관께 국민투표를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지시를 받으셨지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10월 15일 국무회의 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元裕哲 議員**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저희 부에서 절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고가 나면 해야 될 일이 있고 공고 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공고가 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예를 들면 주민등록 일체정비를 해 놓는다는지 이런 일들입니다.

○**元裕哲 議員** 총리께서 지난 17일 국회 답변에서는 재신임 국민투표 비용으로는 약 800억 원 그리고 불신임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비용으로는 약 2000억 원의 정부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갈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정부비용 외에도 그 몇 배가 넘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투표를 해서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그 질문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元裕哲 議員** 그 많은 예산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회복에 써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총리께서 답변드린 대로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면 저희 부서로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元裕哲 議員** 국민투표,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할 생각이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국민투표 소요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850억 내외, 대통령 재선거를 하면 900억 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불신임이 되는 경우에 대통령 재선거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투개표 비용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元裕哲 議員** 다음은 민생치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판에 서민들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공갈, 협박을 일삼는 폭력배들까지 설치하는 탓에 살기가 더욱 어렵다고들 합니다.

청소년 학교폭력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용돈이 줄어든 탓인지 돈을 빼앗는 불량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루이틀이 멀다 하고 발생하는 카드빚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까지 겹쳐서 민생치안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도·절도 범죄와 조직폭력, 학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치안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있었던 범죄들은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검거가 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취약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략 서울 같으면 150여 개소가 된다고 그러합니다.

여기에 적정량의 인원을 배치해서 예방 및 검거를 강화해 나가고, 최근에는 강력범 소탕 100일 계획을 실시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배들의 갈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지금 무기한 조직폭력배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NGO 등에서도 많이 나서서 협조하고 있고, 또 경찰에 학교담당 경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담당경찰관 제도를 훨씬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元裕哲 議員** 지구순찰대 운영과 관련된 문제 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는 과

거에 앉아서 범죄 신고를 받는 이런 시스템에서 지구순찰대를 활용했을 경우에 좀더 기동력 있게 다니면서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어렵게 나타나는 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지구순찰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元裕哲 議員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과출소가 그 지역 치안안정의 상징이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지되거나 인원이 축소되면서 굉장히 체감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元裕哲 議員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또 외곽 지역의 치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元裕哲 議員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2/4분기 수지동향’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교육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보다 무려 2.3%가 높은 5.9%를 기록하였습니다.

주부들은 자녀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과출부나 또는 호프집 아르바이트까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제장관회의에서 사교육비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사교육비를 줄여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경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8개월 동안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이나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두 달쯤 지난 5월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연구팀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현실 분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자 이제 공청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 내에도 특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경에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간단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에서부터 크게는 우리나라 학벌문화의 폐단점을 없애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元裕哲 議員 8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조금만 기다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 생각에는 수십 년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元裕哲 議員 거의 1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공교육 내실화가 기본 틀이고요, 단기적으로 방과 후에 학교시설 이용이라든지,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元裕哲 議員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방과 후 보충수업 말씀하셨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元裕哲 議員 그것은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학교에 붙잡아만 둔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방과 후 유휴 학교시설 이용안은 단지 보충수업이라는 뜻이 아니고 공교육 내실화 측면에서 다양

한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영어회화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서예라든지 청소년축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사교육의 필요성을 공교육 내로 흡수해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한 보충 수업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元裕哲 議員 그러면 학원을 방과 후에 학교 내에다가 임대해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 안도 나오기는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들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부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元裕哲 議員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元裕哲 議員 그리고 또 학원 강사로 하여금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하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元裕哲 議員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방과 후에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해 주겠다는 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스스로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렇습니다.

○元裕哲 議員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이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속에는 주축이 역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元裕哲 議員 교사 정년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원들의 교수능력에 관한 평가가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방안을 만들어서 10여 차례 토론회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지방으로 다니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

금 있으면 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표하겠습니다.

○元裕哲 議員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 ‘대단히’ ‘굉장히’ ‘매우’ ‘몹시’ 이런 단어들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고 있습니다.

○元裕哲 議員 이러한 단어들을 통틀어서 ‘줄라’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습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욕입니다.

○元裕哲 議員 그렇지요. 그래서 갈수록 청소년의 언어습관이 저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元裕哲 議員 나중에 가면 이러한 ‘대단히’ ‘무척’ 같은 단어들은 국어사전이나 문학 소설책에서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언어환경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굉장’이니 ‘조진다’느니 ‘막가자는 거냐’라느니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막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실 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어체를 쓰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元裕哲 議員 아니, ‘굉장’ ‘조진다’ ‘막가자’ 이게 무슨 구어체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또 말씀 하나하나가 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 삼가시라고 건의하십시오.

하물며 옛날에 청와대에서 건배구호 제창하는 것, 대통령께서 어떤 건배구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국민까지 그 건배를 따라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元裕哲 議員 그것 순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 볼 기회가 있으면 “아름다운 용어를 쓰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元裕哲 議員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혼증가율이 세계 1위이고요. 이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안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또 노인부양 문제 여성 취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혼율이 높으면 범죄율도 높아진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릴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혼방지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해야 되는데 가정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바와 같이 적극,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인구대책기획단을 만들었고 또 저희 보건복지부 안에서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정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元裕哲 議員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노인요양시설이 현재는 지자체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설립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많습니다. 농어촌의 취약한 지역에 특히 문제가 많아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元裕哲 議員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요, 그 시기를 당겨서 치매질환 노인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2007년까지

확립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元裕哲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총리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국가 안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4일에 총리께서 주재하셔서 관계대책회의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10월 4일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해서 개최한 회의는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해서 지역과의 관계,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기도지사가 평택 지역의 주민 여러분과 지역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정부 내에 구성되는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위원회의 밑에 있는 기획단 안에 지역협력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경기도 공무원과 평택군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수락해서 이의 설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지 이전 지역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또 주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元裕哲 議員 이달에 수천 명이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가 부안의 위도 핵 폐기장 반대운동 같은 양상을 띠까 봐 상당히 걱정됩니다. 정부에서 미리미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준비와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미군기지주둔지역 피해대책과 그 지원과 관련된 법률이 2건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극……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입법 관계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SOFA 관계라든지…… 그런데 좌우간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피해보상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元裕哲 議員 지금 한미일 3국은 모두 프로야구 챔피언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시리즈가 진행 중인데 세간에서는 현대와 SK가 맞붙었다고 해서 ‘비자금시리즈’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20년이 넘는 한국 프로야구가 진행되는 동안 스포츠와 정치적 불신이 한데 묶여서 풍자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도덕적 흠결을 비아냥대는 ‘비자금시리즈’라는 말을 우리는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능한 정권이 도덕성마저 상실한 채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 국정을 쇄신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順 議員 보자기로 물건을 싸면 그 물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 보자기에다가 이 물건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떡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통 우리는 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대별로 그 시대를 대변하는 보자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보’ ‘멸공통일’이라는 보자기, 이 보자기로 싸면 인권이 유린되어도, 기본권이 유린되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안보’, ‘재건’이라는 보자기, 마찬가지로 정경유착하고 부정부패해도, 때로는 생명이 희생을 당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盧武鉉 정부 들어와서는 ‘개혁’이라는 보자기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보자기로 뒤집어씌우니까 모두가 개혁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그 보자기를 벗겨 봐야 합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개혁이란, “정치체제나 사회제도를 합법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 나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 점진적’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사전을 편찬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 주고 싶습니다.

여하튼 개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유리그릇 가게에 뛰어난 소처럼 위험하다” 유명한 행정개혁 학자 디모크(Dimock)의 지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 가게에 소가 뛰어들어서 소가 움직이는 대로 그릇이 깨지면 그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릇이 여기저기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어제도 나고 오늘도 오전 내내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盧武鉉 정부하에서 개혁은 뭘 의미하느냐? 곧 파괴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의를 달 수는 있겠지요.

보십시오. 서열 파괴, 형식 파괴, 관행 파괴, 상식 파괴, 질서 파괴, 가치관 파괴,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사회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회 파괴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이 태풍 불 때 뮤지컬을 본다, 그것은 상식 파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태풍 때 뮤지컬을 보면 안 되나, 이것은 가치관의 파괴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파괴가 정당화되고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에 일종의 파괴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파괴는 포기로 나타납니다. 포기는 파괴의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포기하고 사회를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기업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지표 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4%입니다. 국민 중 89%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가구 중 10%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고 뭐고, 이것이 파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1만 3000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전문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최소한 그 10~20배 보는데 한 13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얼마나

나 무서운 일입니까?

기업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 중 26%가 해외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 수가 몇 명이나? 100만 명입니다. 우리 일자리 100만 개를 외국에 뺏긴 것입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보니까 현재 기업 중 48%가 해외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포기하고, 곳곳에서 우리 사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파괴가 분열적 리더십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로 미화될 때 우리 사회는 견잡을 수 없는 대혼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파괴현상이 꼭 개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盧武鉉 정부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더 심화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느닷없이 재신임투표 하겠다, 이것이 상식 파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앞 다투어 이 나라를 떠나고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를 막는 것이 정부요, 사회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정부가 사회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여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마치 대국민 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은 사건이 아니라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정부에서부터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나갈 것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합리적인 개혁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현 껍질이 파괴되는 고통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金聖順 議員** 물론입니다. 안정이 중요한데 지금 '사회안정자'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회안정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회안정자로서의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國務總理 高建**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해묵은 사회갈등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하

게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5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 가지고, 특히 노사분규를 포함한 사회갈등 문제 또 부처 간의 정책조정 문제 이러한 것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개혁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정 역할을 이 정책조정회의를 시스템화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聖順 議員**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 빨리 속히 책임총리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현정운영시스템의 대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대통령의 생각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정치권에서 그 운영에 대한 물음 합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제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金聖順 議員** 대통령이 이성을 되찾으면 재신임 투표는 안 하리라고 생각이 됩시다마는, 그렇지 않고 강행할 경우에 그분이 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할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총리로서 자신 있게 국정 혼란 없이 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각오가 총리께서 되어 있으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 만에 하나 불신임을 받을 경우에 국무총리의 처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임하는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할지, 그 후속조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역할을 해야 할지 그것은 그때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金聖順 議員** 사회갈등, 국민갈등으로 번지는 위도 방사성폐기물 후보지 선정 이것을 지금 전면 백지화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인데요, 이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부안 위도 지역의 원전 수거물 보관시설 유치 문제는 17년간 해결을 못 하던 국

가적인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자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흠 없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너무 그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육지에 있는 불안군민들과의 실질적인 대화 기회를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뒤늦었지만 대화를 하기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그 반대하는 위원회의 대표들, 5시간 반 동안 마라톤회의를 통해서 해 가지고 조건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로 해서 대화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24일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聖順 議員** 아니, 그러면 마치 그 대화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화도 대화지만 선정 과정에서 일련의 절차라든가 그 내용이 근본적인 잘못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國務總理 高建** 그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듣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또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탄없이 모든 사안을 조건 없이 진지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합니다.

○**金聖順 議員**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재검토'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IMF 이후에 빈부격차가 많이 심화됐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빈부격차 즉 소득 배율이 97년에는 4.49배인데 지금은 5.12배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지금 큰 문제로 되어 있고, 금년에 발표된 사회통합성 지표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통합성 지표는 빈곤율, 실업률, 소득배율, 부패지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등 5개 지표를 가지고 만든 건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이 지표산출이 가능한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8위였거든요.

이게 사회통합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이 줄고 그 대신 교통세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이 됐는데, 여하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의 임금을 통한 분배를 정상화하고 조세개혁과 사회보

장비 지출 확대 등 재분배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구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대체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최근에 직접세 비중이 다소 하락하게 된 원인에는 말하자면 외환위기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다가 보니까 직접세 부분,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이러한 직접세 위주로 세 부담을 경감해 준 결과 직접세 비중이 내려간 면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정부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또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의 양성화, 과세자료의 확보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金聖順 議員** 사회적 갈등은 국가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나 메커니즘이 없거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IMF 외환위기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지금 우리가 처한 시점에서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제성장은 압축성장을 해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회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흡수하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해결하는 사회갈등 조정 시스템이나 문화가 결여된 것이 우리의 결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시스템을, 질문하셨지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갈등해결 연구 팀을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가려고 그러합니다.

○**金聖順 議員** 답변하시기가 힘드시지요? 연일한 60명 이상 답변하시니까……

○**國務總理 高建** 감사합니다.

○**金聖順 議員** 총리께 더 물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총리께 묻고, 다음에 복지부장관께서 나와 주시고요, 총리께서는 잘 좀 들어 주십시오. 복지부장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國務總理 高建 예, 감사합니다.

○金聖順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니까 쉽게 얘기하고 쉽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총리께서 오전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수가 줄어드느냐, 148만에서 금년에 왜 134만으로 줄었느냐” 이렇게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니까 “수급 부적격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그동안 일부 부적격자들이 저희가 찾아내지 못해서 부당하게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철저히 그것을 조사하는 바람에 숫자가 그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聖順 議員 그것은 일부만 그렇지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金聖順 議員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그것은 아주 작은 거고요.

첫째, 부양의무자 규정이 너무 엄격합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金聖順 議員 우리나라처럼 부양의무자 규정을 적용하는 선진국이 거의 없어요. 일본만 있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선정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둘째, 물가상승률만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용 다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고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셋째, 가구 및 지역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기준을 좀 차등화해야지 전국을 어떻게, 제주도에 사는 분과 서울에 사는 분을 어떻게 다 똑같이 합니까? 물론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별로 기준을 차등화하고 가구 유형별로 최저생계비 계측기준이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넷째, 금년부터 소득인정액제 실시하잖아요. 소득인정액제 실시하면 수급자 수가 한 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金聖順 議員 더 줄잖아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金聖順 議員 그러면 소득인정액제가 뭐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金聖順 議員 예를 들지요. 폐차 직전의 70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 100% 적용해 가지고 연간 소득이 840만 원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인 월 59만 원을 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한 네 가지를 참고하시겠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오전에 총리님께서 답변하셨지만 8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조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변수들을 넣어서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을 다시 확정하는 것으로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聖順 議員 지금 빈곤인구가 500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134만 명 이것 가지고 조물딱조물딱하고 더 줄어들고, 말이 안 되는데요.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아내야지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언제 만들 겁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聖順 議員 ‘빨리 한다’고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기부액이 2213원이었거든요. 미국이 120만 원, 영국이 24만 원 그래요. 우리도 기부를 많이 하는 국민들인데, 민족인데 2200원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기부문화 활성화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규제 중심의 관련 법을 좀 정비하고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등 좀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金聖順 議員 연금기금 고갈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은 지급한다, 이것을 대통령이 한번 선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선언했으면 그 선언에 맞게 맞춰 가서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건의……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제가 대통령님께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국민 앞에 연금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聖順 議員** 국민연금은 선진국의 경험, 그리고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해 볼 때 조속히 제도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맞습니다.

○**金聖順 議員** 올해 안 하면 다음 재계산연도인 2008년까지 어렵잖아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맞습니다.

○**金聖順 議員** 급하거든요. 금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금년에 꼭 해야 합니다.

○**金聖順 議員** 꼭 해야 하지요? OECD IMF 세계은행 이런 데에서 연내 꼭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갈등 있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나게 큰 짐이 될 텐데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2008년도에 가면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金聖順 議員** 그러면 금년에 하시겠어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금년에 꼭 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金聖順 議員** 돕는 거야 지적인 거 돕는 사람이니까 도와야지요. 이것 꼭 서두르세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金聖順 議員** 갈등 속에 그냥 묻히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자살이 1만 3000명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13만 명이 자살을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자살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정신과 진단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金聖順 議員**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하는 것과 같이 자살 예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드시겠어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저희도 심각합니다. 이

제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지역사회에서 상담을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聖順 議員** 자살예방센터 만드는 것……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예.

○**金聖順 議員**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없잖아요. 전화가 없잖아요?

전화번호 아십니까?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전화도 개설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하겠습니다.

○**金聖順 議員** 전화번호가 1588-9191인데 이 여덟자를 어떻게 외웁니까? 죽기 전에 내 생명을 한번 호소해 본다, 제 생각 같아서는 천사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1004를 112나 119같이 한번 개설하지 그러세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전화번호를 어떤 자리로 할 것이냐는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전화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金聖順 議員** 범정부 차원의 고령사회종합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지금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이 만들어졌고 또 저희 정부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인력 운영센터를 연금공단에 개설하고 이분들에 대한 최저소득보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의료수요를 줄여주고 더욱 건강증진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하도록 했고, 세 번째는 노인들의 호문화 창출을 더 확대시켜서 21세기 신 호문화를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金聖順 議員** 지난번 고령자고용촉진공단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保健福祉部長官 金花中**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이 135억이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金聖順 議員** 개혁은 이례적인 사건이나 충격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으로 투영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멀리 내다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金台植** 金聖順 의원님은 연인끼리 속삭이듯 조용조용히 했으면서도 잘했다는 박수를 방청석에서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高興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興吉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高興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대통령’, ‘미숙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좌우 간의 이념 대립, 동서 간의 지역대립, 집단 간의 이해대립, 민생경제의 파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와 지난 정권 5년과 맞먹을 정도로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고 ‘못해 먹겠다’, ‘재신임받겠다’면서 국민의 동정심과 안정심리를 악용해 온 나라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은 또 다시 ‘정치적으로 타결하겠다. 그러나 재신임은 유효하다’고 말해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찢러 보고 안 되면 저렇게도 한번 찢러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국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대통령의 치기 어린 투정을 받아 줘야 합니까?

朴相千 민주당 대표께서는 지난 주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러한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대통령의 당선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총리와 행정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에 국한하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 들께서는 국무위원실에 가서 쉬면서 제 질문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어휘를 동원해 가면서 특정 언론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발언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상식 이하의 조치들을 통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盧 대통령의 대언론 조치들이 오로지 특정 언론을 손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盧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보특보를 지냈던 인사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아직도 진실을 가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정부는 각 부처의 기존 기자실을 완전 개방하고 브리핑 룸을 만드는 등 취재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기자실 개방이라는 단어는 언뜻 보면 모든 언론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공평한 취재 기회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메이저 언론들의 취재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언론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받아서 쓰라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국 언론 간의 차별성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언론의 영향력은 축소시키고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의 영향력은 확대하자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언론의 비판기능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언론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려는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참여정부는 언론과 정부가 긴장한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상적인 관계로 유지해 가자고 하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브리핑 룸을 만들었고, 또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高興吉 議員** 총리의 답변은 교과서적인 답변

입니다. 제가 그 답변에 동의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 일국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언론이 이를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國務總理 高建 일반론적으로 언론이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해서 이러한 사실 미확인 보도가 당사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것은 언론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高興吉 議員 반론권 문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린 사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언론만 골라서 대통령이 직접 표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은 기사의 크기와 기사의 의도만을 문제 삼아서 특정 신문에 대해 취재거부를 자기 비서진에 지시를 했습니다.

총리,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지난 8월 대통령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한 것인데 일부 우려를 감안해서 결국 소송절차중지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의 특정 신문 취재 불응의 구체적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저렇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高興吉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소송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언론을 겁 주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은 즉각 취하해야 하고 홍보수석 역시 특정 신문에 대한 취재거부 지시는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청와대에 소 각하와 취재거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高興吉 의원님의 그런 말씀을 전언해 드리겠습니다.

○高興吉 議員 감사합니다.

총리, 현 정부 출범 후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가 金泳三 정부에 비해서는 무려 35배, 金大中 정부에 비해서는 10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언론중재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은 말하자면 잘못된 정보, 오보보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정부 노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면 가판을 보고 배달판을 고친다든지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방법 대신에 제도상의 정상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高興吉 議員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것은 盧武鉉 대통령이 오보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로부터 언론보도를 분류해 매일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각 부처가 일단 중재를 내고 보자는 식으로 중재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신뢰성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언론보도 분류 일일보고는 이를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바로 일일보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알려진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노력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합리적인 비판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정책을 수정·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高興吉 議員 총리께서도 이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받는 일 없습니다.

○高興吉 議員 이 보고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폐지할 것을 국정홍보처에 지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고 한국의 언론사태를 우려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언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된 한국의 언론환경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 언론환경을 개선하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결의문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누가 그런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불필요한 일을 추적하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총리, 우리와 같이 언론자유탄압감시대상국에 있었던 스리랑카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언론자유보장을 약속하고 환경을 개선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총리 역시 우리나라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盧武鉉 참여정부와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언론과의 대화 노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IPI 관계는 역시 새 정부의 언론에 대한 기본입장에 대해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는 분명히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한다, 언론의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을 한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高興吉 議員 한국이 언론탄압국이 아니라는 얘기는 국정홍보처장이 앵무새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께서는 좀더 높은 차원에서 그런 인식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큼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鄭鎭碩 의원께서도 KBS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는 KBS 사장이나 KBS 직원들의 소유가 아니라 전국민의 방송입니다. 총리, 동의하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공영방송입니다.

○高興吉 議員 따라서 사장 개인의 이념에 따르거나 일부 직원들의 검증되지 않은 생각에 따라 방송을 하는 실험 대상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KBS의 편향적인 방송은 그도가 지나쳐 대다수 국민들이 KBS의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물론 KBS의 현직 간부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5000여 명의 KBS 직원 대다수는 건강한 사상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방송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사장을 비롯한 극히 일부에 의해 KBS가 이러한 방송을 함으로써 KBS 전체의 위상과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KBS의 사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처음에 이것이 KBS 사보가 아니라 노보인 줄 알았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KBS 국감, 이념적 정치공세장으로 전락’ 전체 12페이지 중에서 7페이지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특히 문광위원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KBS 사보의 발행인은 정연주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KBS가 보도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거꾸로 우리 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제 KBS 문제는 KBS 사장 개인의 결단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께 KBS 사장의 거취 문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우선 지적받은 KBS의 일부 편집보도에 대해서 방송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권고에 따른 앞으로의 KBS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행 방송법에 의거해서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가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거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高興吉 議員 이 문제와 관련해서 KBS 사장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사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미 이에 대한 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KBS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모인 KBS 이사회에서 사장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 KBS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다수를 추천해 주고 계십니다. 9명 중 6명의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을 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별도로 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중복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高興吉 議員** 그러나 KBS 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에서 오더로 임명된 사람이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 사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이것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KBS의 행태에 분노한 나머지 수신료 통합징수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신료 통합징수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방문징수 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리, 현행 방송법 67조2항에는 “수신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43조2항에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결국 통합징수 방식은 행정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따라서 그 조항은 삭제하고 분리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원래 한전에 위탁해서 전기료와 함께 부과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납부 편의, 그리고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의 근거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高興吉 議員** 방송법과 시행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실상 시행령은 위법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시행령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회의에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7월 본회의에서 2002년도 KBS 결산안이 부결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알고 있습니다.

○**高興吉 議員**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KBS 결산안이 부결되었는데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KBS 사장 이하 집행간부들이 총사퇴해야 될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KBS 결산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NHK 방송과 같이 국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KBS 예산안에 대한 국회승인 문제는 방송의 독립성 또는 자율성과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高興吉 議員** 시간이 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판교 개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교는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지역구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교가 본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온 성남시민, 경기도민, 심지어는 서울의 전 아파트 주민까지도 이 개발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 신도시 교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분당선에 대한 내년도 사업추진예산 100억원이 기획예산처와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2005년에 착공을 하더라도 2009년 말에나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판교 신도시 입주 완료가 2008년 초로 계획되어 있어 입주 후 2년 동안은 판교와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대의 교통난이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은 뻔합니다.

총리, 정부의 장밋빛 계획만 믿고 입주했던 분당주민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보 후 입주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입주 전에 신분당선을 완공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100억 원의 예산은 토지 매입비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당선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두산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3차 제안요청을 공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아마 어려

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지만 정부로서는 최대한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적극 협의를 할 것이고 필요한 정부예산은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판교 신도시 입주 시점인 2007년 이전에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말하자면 2008년이나 2009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판교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우선 영덕-양재 간 고속도로 그리고 탄천변 도로, 세곡동-판교-풍덕천 간 도로, 이러한 대체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高興吉 議員 감사합니다.

판교 보상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에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예.

○高興吉 議員 행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행자부장관도 정책보좌관을 쓰고 계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세 명을 쓸 수 있는데 한 명만 쓰고 있습니다.

○高興吉 議員 정책보좌관 전임자가 임명한 사람이지요?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아닙니다.

○高興吉 議員 직접 하신 것입니까?

○行政自治部長官 許成寬 예.

○高興吉 議員 정책보좌관을 둘러싼 각 부처 간의 갈등이라든가 공무원 기존 사회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台植 高興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高興吉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지적 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결산심사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상정하는 문제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결산심사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새기셔서 그러한 대상 기관이 혹시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참여통합신당 동대문갑구 출신 김희선 의원입니다.

세계 각국은 10년, 20년 후 일류국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유럽은 통합으로 미래를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고 미국은 이제 패권전략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체 상태입니다. 정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합된 국민의 힘이 필수적인데 그 구심점이 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민생경제에 활로를 뚫어야 할 정치는 여전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 정치권 사이의 불신과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있고,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목을 잡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사실은 이러한 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신임 투표를 선언한 취지와 목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는 측근인 최도술 씨 비리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 정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고 재신임을 받아서 국정을 대

대적으로 쇠신하려고 하는 정치적 결단으로 재신임 투표를 제의하셨습니다.

물론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신 직접적인 계기는 측근의 비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그동안 국정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김희선 의원** 예, 지금 상황은 혼란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재신임 투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재신임 투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다시 한번 통합된 국민의 힘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되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신임 투표는 대통령이 교체되거나 또는 유임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시지 않지만 야당 의원님들께서 대통령의 교체 의견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저의 견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 선언 이후에 구체적인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예,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받게 되면 국민의 에너지를 재결집해서 새로운 각오로 국정쇄신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사회 불안 요인들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 그리고 세부적인 행정적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릴 것이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번 기회에 선배·동료 야당 의원님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면서 각 의원회관실에 계신 특히 야당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많은 야당 의원들께서 쉽게 탄핵이나 하야 즉 대통령 교체를 말씀하시는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취지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이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신임 투표 아닙니까?

저는 야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주장하시고 싶으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순리적인 방법, 이 재신임 투표가 가장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는 지금의 상황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정치의 근본적 신뢰 회복입니다. 정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힘이 어디로 모아지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만들어 낸 부끄러운 유행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이 말은 보통 사회인이 썼다가는 큰일나는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행동과 말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니면 말고를 하면 사회에서는 민·형사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면 말고’ 이것이 통합니다. 면책특권을 악용한 결과를 가져온 ‘아니면 말고’ 식의 이 정치문화를 국민들은 끝장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16대 국회에서는 근거 없이 불신만 조장하는 ‘아니면 말고’를 청산합시다. 정치자금 문제도 우리 스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제 머리 제가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16대 국회에서는 이 말을 바꿉시다. “제 머리 제가 깎을 수 있다”로 속담을 바꾸어 봅시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이신 김근태 의원님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요즘 인기가 점점 올라가십니다, 답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박또박 잘해 주셔서.

‘진실과 화해 프로그램’을 잘 적용하면 좋은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먼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자금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또 스스로 조사를 받고 그래서 검찰은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지만 대가성이 있거나 그리고 개인 치부에 사용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제도화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치인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국민도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계서는 이런 취지의 법 적용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당장 현실적으로 법 적용에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임의적 적용은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거시적 대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시고 중지를 모으셔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도 하시고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밟게 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선 의원** 좋습니다.

또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김희선 의원** 이 3년을 5년 이상으로 늘려서 법 위반한 사람이 다시 출마할 때 불이익을 주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부분은 법무부가 직접 소관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 관련된 것을 국회에서 개정하시고 검토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선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책임지는 자세로 사회갈등과 현안을 풀어 냄으로써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교육비, 청년실업, 소외계층에 대한 강력한 사회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시기 어려우시지요?

대통령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집값 안정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김희선 의원**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시장의 문제로 생각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세부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그 주범은 부동산 투기이고, 투기를 조장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너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수급관계, 저금리 그리고 교육과 같은 특수 수요 관계,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종합대책을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金台植 부의장, 趙富英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시장 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단계적인 시행, 이런 개념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신 것은 최근에 집값 급등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집값만은 반드시 안정시켜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토지공개념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종합토지세의 강화라든지 부동산실명제라든지 기왕 실시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 범위 내에서 추가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희선 의원** 제가 앞으로 총리께 드리는 말씀은 당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가 앉아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불량 문제도 전향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는 신용불량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신용불량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근본적으로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파생한 사회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신용회복지원기구의 중립·독립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운용자금을 채권금융기관에서 보조받는 등 주로 채권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제2의 채권추심기관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총리님, 공익적·중립적 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무관리기금을 신설해서 소액 채무자를 지원하고 신용갱생 후에도 일정기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특히 저소득층 신용채무자에게 우선 혜택을 주고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서민·민생정책을 소외계층의 시각에서 점검해 보시고 통합과 사회안정 차원에서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국민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에는 우리 사회의 굴절된 현대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의 형식적 중심이 대통령이요, 국회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적 중심은 국민 저변의 가치라고 봅니다. 세대와 소속한 집단을 초월해 면면히 흐르는 공통의 가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의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지난 반세기를 살아왔습니다. 친일파가 정권을 쥐었고 군부로, 독재로 이어져 왔습니다. 정통성 없는 세력이 주류를 차지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가치 기준은 정의냐 불의냐가 아니라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전도되었고, 지역갈등, 민족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공통의 지향보다 편 가르기가 우선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국민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라도 왜곡과 굴절이 시작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16대 국회에서 그런 일을 하자고 지난 8월 14일 과반수가 넘는 여야 154인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법안을 냈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상임위 배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께 공동발의한 154인 의원님들의 이름을 대신해

서 정중히 촉구합니다.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배정해 주십시오. 법안을 심의하지도 않고 폐기하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학교의 공식행사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 제창을 강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친일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어떻게 비판한다는 말입니까? 진상규명만 하자는데 17대로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친일 청산, 16대 국회가 해냅시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국사교육의 강화를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각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역사인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총리께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역사교육의 양과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체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자기 나라 역사하고 세계사를 합쳐서 역사라 부르기도 하고, 자기 나라 역사, 세계사, 지리를 합쳐서 사회과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역사'라 부르기도 하고 '사회과'라 부르기도 해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마는, 우리와 교육과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역사는 105시간, 고등학교는 선택이기 때문에 0시간에서 140시간 정도로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학교에서 국사만 102시간, 세계사까지 합치면 136시간에서 170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는 68시간에서 204시간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국사수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에 속하고 유럽과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습니다.

○김희선 의원 일본하고 비교할 때 일본보다 조금 많이 가르친다는 말씀이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하지요.

○김희선 의원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중학교 1, 2, 3학년은 국사교육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 하고 있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2시간…

○김희선 의원 예,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프랑스는 4시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3.33시간을 교육하고 있고, 영국도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에서도 미국은 어떠냐 하면 미국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역사과목에 가중치까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교육계 인사들과 얼마 전에 토론한 몇 가지 과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합사회과를 폐지해서 국사교육을 강화해라, 국사를 전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 평가과정에서 국사 분야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근현대사 교육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 국민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 제가 이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추후 서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김희선 의원 작년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에 이어서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에 고구려가 중국에 소속된 변방민족의 왕조였다는 엄청난 왜곡된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 또한 중국은 고구려의 유적이 많은 집안시라는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사가 중국사로 편입될 그런 우려가 됩니다. 우리 역사가!

뿐만 아니라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적포기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지금 제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역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 주는 큰 사례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국가가 자국의 역사를 등한시하고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중국이 만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구려사를 왜곡해서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야사를 왜곡해서 일본사에 편입시킴으로써 한반도의 역사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계와 일본 역사계가 공동보조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75년부터 전 세계 교과서에 한국이 잘못 기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도 계속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교적인 루트를 통한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민간 사학자를 통한 학회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출판사를 상대로 정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차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외교통상부 그리고 문화관광부 등등 관계 부처와 공동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바로 알리기라든가 현재 각 부처끼리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김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나오시겠어요?

역사인식에 대한 무관심은 제가 보니까 사법제도에도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사법시험제도를 개정해서 시험 과목에서 국사과목을 제외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김희선 의원 이런 현행 제도가 지속된다면 충분한 역사인식을 갖지 못한 사법 인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양심적인 사람들의 우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위는 떨어지고 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국민이 보는 것이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김희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사법시험 과목에 국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과목을 사법시험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행을 하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이 시간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각 의원회관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를 포함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국민은 우리 사회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아니냐,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관계없이 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그런 일을 하자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렇게 애쓰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은 정치인이 사회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정쟁만 일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래의 정치, 정치인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실천적 자기반성과 쇄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계기로 거듭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도 재신임을 받을 각오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위협하고 더럽고 힘든 3D 정치를 16대 국회에서 마감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김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창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입니다.

등지를 옮긴 국민참여통합신당주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본 의원은 많은 것을 질문하고 고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회의는 정부를 상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첨예한 갈등과 균열의 파열음이 높아 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시스템과 코드라는 정체불명의 신조어로 인해 대한민국은 온통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무한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 언론 탓을 하며 대통령 직을 못해 먹겠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하여 대한민국을 벼랑 끝에 내몰아 전 세계의 근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젊은 리더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 사상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선저우 5호의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과학입국 중국의 우수성과 중화의 자긍심을 세계만방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쟁 상대국인 중국의 젊은 리더십 후진타오는 우주로 도약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리더십 부재로 자중지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이후 국가원로들과의 만찬 시에 盧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하여 흥두께로 맞은 기분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총리, 재신임 발언이 어떻게 해서 흥두께로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제가 전혀 예측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달 의원 盧武鉉 대통령께서 국가 중대사 안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무총리와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사전에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박창달 의원 그렇지요?

盧 대통령은 高建 총리에 대해서 책임총리 운운하며 말로는 중요시하고 있으나 정작 국가의 막중대사에서는 총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 서운한 감정이 없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없습니다. 원래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는 17대 총선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정치권과 협의해서 실시한다는 것이 盧武鉉 대통령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책임총리제라는 개념은 아주 모호한 것입니다.

○박창달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합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이후 외신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재신임 발언은 정국안정 노린 승부수” “盧 정권 말기 시대” “대통령의 이상한 정치” “盧 대통령의 재임 8개월은 실수의 연속”이라며 대한민국 盧 대통령을 불안 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국 리즈대학의 한국학 전공 에이든 카터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떠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盧武鉉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 그만하시려면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에이든 카터의 지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는 외국인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창달 의원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국내 언론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헌정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외신은 연일 비판 기사를 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나 발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없습니다. 정부는 내외신을 가리지 않고 사실이 잘못 보도된 오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외신을 불문하고 정국에 대한 언론의 평가나 비판, 이런 것은 언론의 고유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데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박창달 의원 그러니까 언론의 비판과 평가는 언론의 고유권한이다 이 말씀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달 의원 알겠습니다.

盧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키고 대통령 직을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진 대통령 본인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며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65조제1항에 의거 응당 대통령 탄핵사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말씀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서 나중에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한 말씀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창달 의원 총리, 항간에 회자되는 ‘개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코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잘 모르겠습니다.

○박창달 의원 그것은 ‘개혁코드’의 약자로 현재 ‘개코’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위 개혁코드 인사라는, 참여정부가 아닌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발탁된 개코 장관들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발언 경쟁으로 연일 盧飛御天歌만을 읊조리며 국민들에게 심한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총리, 본인께서는 현 내각의 문제 장관 및 盧武鉉 대통령과 국정을 수행하면서 코드가 맞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아무하고도 코드를 맞추는 것보다는 개방적으로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창달 의원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해바라기성 발언 경쟁만을 일삼는 개코 장관에 대해서 총리께서 직접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저는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아직은 해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창달 의원 지금 우리 국회 주위에서는 高建 총리께서 근래에 와서 굉장히 소신 있는 답변과 소신 있는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10월 10일 盧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있는 이후 바로 다음날 高建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내각 총사퇴, 청와대 1급 이상 비서진들이 일괄 사퇴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과 내각, 청와대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반의 거대한 도박을 일삼는 그 순간 본 의원은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전술인 ‘벼랑끝 전술(Blinkmanship)’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현 정부는 386운동권을 주축으로 하여 출범한 정부답게 북한의 벼랑끝 외교전술을 국내 정치 현장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북 편향의 운동권 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저와 국무위원들은 재신임 정국에 이르게 된 데까지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의 뜻을 모아서 제가 청와대로 올라가서 대통령께 전달해 드릴 때의 심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시기에 국정 공백이 올 것을 생각하면 총사퇴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누차 강조해 오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뜻에서 국정운영을 쇄신할 수 있는 전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박창달 의원** 다음으로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군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 소음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 51개소의 군 공항과 1450개소의 훈련·사격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소음 관련 특별법 마련을 위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군 공항 및 훈련·사격장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본 의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國務總理 高建** 알겠습니다.

○**박창달 의원** 수십 년째 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단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K-2 공군기지를 도심 한복판에 두고 살아온 대구 시민들은 수십 년을 국가 방위와 안보 때문에 피해를 입고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高建** 대구 K-2 비행장의 소음 문제도 전반적인 군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대구 K-2 공군기지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방음정비고 2개소를 설치했고 1개소는 지금 추가 설치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비행시간과 고도조정, 일몰 이후의 비행제한 등 우선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창달 의원**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아주 편리한 답변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에 위치한 학교는 난청과 정서불안,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수업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건교부 교육부 환경부는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식의 행정으로 인해, 범정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께서는 총리실 산하에 가칭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음피해예방대책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기획단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꼭 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좌우간 관계부처 간에 정책조정이 안 돼서 시행이 늦고 있다 하는 사항은 확인해서 총리가 직접 나서서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창달 의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항공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소음대책사업 대상 공항으로 지정하는 반면 대구·청주·광주 공항은 수억 원의 소음부담금까지 징수하고도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國務總理 高建** 이것은 소음기준이 일정 dB 이

상의 공항에 대해서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구·청주·광주 공항의 경우는 소음부담금은 징수했지만 일정 소음기준 이하였기 때문에 소음대책사업은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창달 의원 그 답변은 총리께서 너무 모르시는 답변입니다. 훗날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사람과 지식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며 세계 각국은 인적 자원을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총리제를 도입하여 범정부적인 인적 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양성·고도화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 동법 시행령의 제정,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으로 교육부총리가 인적 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적 자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 조정권 같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범부처적인 인적 자원 정책의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인적 자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조정권 또는 사전협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國務總理 高建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 자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예산 당국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존중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존중될 수 있도록 총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조정권이라든지 사전협의권이라든지 하는 개념이 우리 정부부처 내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달 의원 수고했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는 안보논리를 앞세워서 수십 년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방부의 안보논리에 밀려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교보건기본방향을 시달해서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소음피해 학교에 이중창 공사,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전달함으로써 사실 소음피해 최소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총 4회에 걸쳐서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창달 의원 대구 K-2 공군기지 주변 학교는 전국에서 소음피해가 가장 극심합니다. 부총리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지역 주변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2004년에 K-2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의 학교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창달 의원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 수석에게 충성서약까지 한 송두울 교수는 본인은 경계인으로 살았다고 하나 91년 5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가 송두울 씨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송두울 씨는 명백한 간첩입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창달 의원 명색이 교수이고 학자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께서는 과연 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송두울 씨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시하겠습니까? 송두울이라는 교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 또한 지금 사법 절차가 있으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역시 가치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특정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역시 객관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창달 의원 지금 우리 학생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간첩이 분명한 사람을 민주인사인 양 미화하였던 일부 언론과 단체 심지어 교육방송인 EBS에서도 송 교수에 대해 해외 민주인사로 분류하는 등 편향된 시각으로 방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EBS의 이런 방송 내용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기본적으로 EBS는 설립 목적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인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창달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2003년 8월 15일자로 선거사범에 관하여 대통령 특별사면·복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盧武鉉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정길 전 의원만을 복권시키고 야당의 다른 의원은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공평을 잃은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장관, 김정길 전 의원의 변호인이 현재 문재인 민정수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몰랐습니다.

○박창달 의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민정수석 문재인 씨가 김정길 씨에 대해서 1심, 2심, 3심을 변호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박창달 의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박창달 의원 그런데 김정길 씨의 범죄사실이라도 대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당시 복권의 기준이 가벼운 선거운동 방법상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허위사실 공표나 금품 살포와 같은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 된 것입니다.

○박창달 의원 지금 장관님의 답변은 10월 17일자 金武星 의원께 하신 답변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미한 선거운동’이라는 잣대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길 씨에 대한 당시 고발 내용은 선거용 책자와 홍보물의 제작·배포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책자 인쇄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의 유형을 고려해서 대상으로 했다는 취지입니다.

○박창달 의원 그래서 김정길 씨가 그 당시 선거사범으로 걸린 것은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홍보물 책자와 팜플렛을 배포했기 때문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사범들의 사면복권 잣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저희로서는 충분히 고려한 기준입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시 또 다음번 기회에 재고하겠습니다.

○박창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재인 씨가 변호한 사범은 복권되고 다른 야당의 동료 의원들은 복권이 못 되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 수많은 정치인 선거사범 중에 유독 김정길 씨만 복권된 데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우리 장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박창달 의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趙富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고양 일산갑 출신 정범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닷새째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 재신임 발언 이후 국정이 혼란스러운데 총리께서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되어갑니다마는, 이 정부가 내걸었던 국민참여는 구호로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어디에도 국민 의사를

중중하고 사회 각 계층의 갈등을 포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사정책은 노사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개혁을 기치로 내건 盧武鉉 정부는 군사정권 시대의 유물인 사회보호법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사형제도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장 문제로 전북 부안군은 주민 7만 6000명 전체가 생업을 내놓고 이 문제에 달라붙어야 할 정도로 혼란 사태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천 명의 진압경찰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식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은 노조나 방송계, 시민단체 등 방송관련 거의 모든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방송사 노조에서는 급기야 디지털방송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정부는 적절한 의견수렴도 또 방송계에 대한 설득도 못 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참여를 말하려면 먼저 그에 걸맞는 리더십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진실한 애정이 담긴 그런 문제의식과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에 노동자의 참여는 필요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9월에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지요?

○**노동부장관 權奇洪** 예, 그렇습니다.

○**정범구 의원** 이게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權奇洪** 로드맵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개념을 가진……

○**정범구 의원** 기본그림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權奇洪** 예, 그렇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정범구 의원** 이것이 대략 22쪽 정도의 방안인데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면 결국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주요골자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權奇洪**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기본권도 신장하고 동시에 국제기준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보장되고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대응권도 동시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사 공히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범구 의원** 노사의 자율적인 타협이라는 것이 결국 사용주로 하여금 불법파업에 대한 청구권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權奇洪** 동시에 노조에게도 파업권을 이때까지보다는 좀더 넓게 보장하고 있고 단결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현재 조정전치주의제도에 의해서 묶여 있는 부분도 풀어 주고 또 필수공익사업의 개념도 없애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대정부질문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다뤄지는데 아주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만 추려 본다면 결국 제가 파악하기에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노사관에 따라서 친기업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우선 대통령의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이 대기업 노조의 활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이 집단이기주의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이 지금 경기불황의 주요 책임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 盧 대통령의 시각 아닙니까?

(趙富英 부의장, 朴寬用 의장과 사회교대)

○**노동부장관 權奇洪** 여러 노사문제와 관련된 시각 중에 그것도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범구 의원** 이 시각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고 대통령의 이런 시각이 여러 차례 발표되고 난 후에 마련된 노동부의 노사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친노적이 아니라 친기업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노사 간의 자율해결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사용자의 대응권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의 단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그 폐해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얼마 전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자살 같은 것 아닙니까?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스스로 7억 4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조치의 압박을 받다가 자살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權奇洪** 노조의 주장은 그러하고 그런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 동기가 유일하게 그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물론 일부 대기업 노조의 활동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조가 여전히 정부와 기업의 태도에 따라서 그 존재가 좌우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기업이 내놓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조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민주노총 측의 주장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체 44개 사업장 1700억 원대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노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노사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노조의 활동을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權奇洪** 그런 측면이 우리 노사관계에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상적으로 지금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받아들여져서 또 다른 측면들과의 균형감각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범구 의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쪽으로는 대기업 노조 활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다른 한쪽,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기업 사정에 밝아지고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런 친기업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친기업적 입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최근의 SK 비자금 사건에서 보듯이 정경유착이라든가 또는 족벌경영이라든가 또는 부당 편법 증여·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기업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 측인 노조의 태도에만 매를 드는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입니까?

○**노동부장관 權奇洪** 한쪽에 매를 든다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한쪽에 매를 드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 자신도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범구 의원** 노동부장관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니까 공정성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공동체를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하는 만큼 그러면 우리 재벌개혁 문제라든가 기업의 공정성·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우리가 예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權奇洪** 지금 재계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도 더욱 강화되고 동시에 노조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질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범구 의원** 시간 제약상 유용한 논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노사의 진정한 조정자로서 노력할 때 노사정 3자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어느 한쪽의 일방 편을 들어서 노사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權奇洪** 당연히 그러합니다. 다만 상황이, 예를 들면 법과 원칙도 버릴 수 없는 하나의 원칙이고 대화와 타협도 버릴 수 없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 대화와 타협의 기조가 사회를 지배할 때는 법과 원칙은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만, 폭력적인 사태가 주조를 이루는 경우에는 어차피 대화와 타협이 또 뒤로 물러나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상황이 그 두 원칙의 적용 형태를 다르게 나타나게 한 것이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두 개의 원칙의 일관된 시현이 그 원칙 자체에서 무너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정범구 의원** 무너지지 않은 원칙이 뭐라고요? 말씀을 좀 현학적으로 하시는데 다시 한번……

○**노동부장관 權奇洪**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과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두 개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범구 의원** 지금 우리 노동조합과 기업이 힘에서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權奇洪** 그것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시스템 속에서 관철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노 쪽이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위기업에서 특히 대기업의 잘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구체적인 입단협 과정에서의 힘은 또 반드시 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상황상황에 따른 판단이 가능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노사의 힘의 균형을 재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범구 의원 다음 질문 때문에 노사관계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이 문제, 정부가 어느 한 쪽에 편향성을 가져서는 결코 노사평화는 요원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部長官 權奇洪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범구 의원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정부가 진정한 국민참여정부를 지향한다면 제 생각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에 대한 배제, 제거의 논리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로 저는 의연히 존속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제도로 사형제도와 사회보호법 문제를 들고 싶은데요,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합치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 인권존중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어느 한쪽의 결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범구 의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12개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지요? 사형제도가 온존되어 있는 나라 83개국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98년 이후 현재까지 집행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에서도 유명무실해진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특히 민주화 이후에 사형제도가 거의 시행이 안 된…… 최근의 4년간 그렇습니다.

○정범구 의원 법은 현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현실성을 잃어버린 제도가……

○國務總理 高建 사형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사형제도의 존속효과 전체가 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도 저는 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범구 의원 총리로서는 존재하는 현행법에 대해서 가부 여부를 말씀하기 어렵다, 이런 논조로……

○國務總理 高建 폐지 여부에 대해서 총리로서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범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도 공식적으로는 사형제도의 유지를 찬성하고 있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그런데 장관께서도 어느 기자회견담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장관께서 변호사 시절이던 때의 어떤 한 자료를 보면 사형제도 폐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신 것도 있는데요, 법무부장관 이전에 법률가로서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 부분은 여기서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고요.

○정범구 의원 장관 이전에 법률가로서 개인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개인적 입장을 장관의 신분으로 대정부질문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99년에 제가 사형폐지론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글을 쓴 적은 없습니다. 인권의회에서 사형폐지 논의와 관련된 글이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소개하는 글을 썼던 적은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자세한 내용은 제 질문서에 정확한 출처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155명 의원의 발의로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입법부와 별개로 국민의 인권과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서 정부에서도 이것의 폐지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무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도의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사형제 폐지를 선택하거나 지향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장관으로 있으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모임의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려는 하겠습니다.

○정범구 의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도 양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호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사회보호법과 관련해서도 현재 법무부가 여러 달에 걸쳐서 폐지론을 포함한 대폭 개선안까지 법무부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법 집행 당국으로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에 다시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올해 6월과 8월에 토론회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네티즌들이나 여론의 조사 결과는 존치론이 54% 55%, 폐지론이 43% 48%,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와 같은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존치론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정당성은 가질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회보호법이나 청송감호소에 들어앉아 있는 보호감호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추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사회보호법 자체가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난 보안처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그런데, 법률가이지 않아요. 형법을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형사법으로도 처벌하고 사회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 아닙니까? 이것이 굳이 현재의 판단까지 요구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제도와는 다른 이원화된 적법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보호감호소의 실태나 상황이 잘못됐고 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의견, 폐지론까지 포함한 모든 국민적 합의를 귀 기울여 듣고서 최선의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정범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논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호감호제도의 명목상 목적이 사회복지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정범구 의원 그런데 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일반 교도소 출소자들 재범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지요?

○法務部長官 康錦實 예.

○정범구 의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부분 때문에, 상습범죄자 때문에 보호감호제도가 도입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이들의 상습성이 높아서 범죄율이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다 장기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범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 판단과 지금 장관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法務部長官 康錦實 두 가지 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범구 의원 이 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감호자 대부분이 아주 빈곤하고 저학력층이고, 또 피감호자의 대부분인 74%는 절도 등의 단순범죄입니다. 일상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흉악범인 아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호법 같은 대표적인 악법을 폐지하는 데에 법무부가 앞장서는 것이, 그래야 정말 법무부가 우리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지키는 부서라는 것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法務部長官 康錦實 그와 관련해서는 폐지론 쪽에서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계적 폐지론으로 접근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건의도 받았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총리께 부안 핵폐기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안 핵폐기장 사례를 보면 참여정부의 구호가 정말 깃발로만 나부끼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수렴 절차 없이 정부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가장 전형이 바로 이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내일 주민대책위원회와 정부 간에 1차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예.

○**정범구 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 측은 폐기장 선정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 같고 정부는 이 폐기장의 안전성 문제를 주로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國務總理 高建** 모든 사안을 조건 없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을 대화의 테이블에 놓고 진지하게 대화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범구 의원** 이 부안 핵폐기장 사건 때문에 8만 군민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충돌 과정에서 2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또 16명 구속, 불구속 52명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 피해가 나왔습니다. 현지의 보고를 보면 심지어 손자와 손을 잡고 시위에 참여했던 60대 할머니까지 경찰 곤봉에 맞아서 쓰러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과격한 시위를 진압하다 보면 진압도 과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격 진압이 있었을지는 모르되 경찰이 공격적으로 과잉 진압을 한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범구 의원** 아니, 60대 할머니가 손자 손 잡고 주민들 하는 시위에 따라 나섰다가 곤봉에 맞아서 쓰러졌으면 과잉 진압 아닌가요? 할머니가 무슨 과격 행동을 했을 수 있을까요?

○**國務總理 高建** 과격시위 대열에 같이 섞여 있었다면 결국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상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범구 의원** 만약에 과잉 진압이 있었다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물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과격한 시위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핵폐기장 선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현재의 핵에너지 의존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스웨덴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신규 건설을 중단하는 등으로 대체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희도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에너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개발이 되어서 광범하게 보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40%는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자력에 의존을 하면서도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범구 의원** 그런데 지금 총리의 말씀이 이윤 배반인데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전을 산자부의 계획으로 보면 50%까지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지금 총리의 말씀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國務總理 高建** 그동안에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더 중점을 두어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범구 의원** 저는 핵에너지 포기 정책만이 현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환경부장관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산을 지하 문제에 대한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측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장관님들 나와서 답변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걸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고요.

총리께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 가지고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가 미국식 전송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國務總理 高建** 예, 1997년에 정했습니다.

○**정범구 의원** 그러나 다른 한 축인 방송위원회는 관련 방송업계가 요구하는 유럽식 전송방식과의 비교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필드 테스트입니다. 이 필드 테스트를 요구하는데 정보통신부가 고집스럽게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알고 계시니까?

○**國務總理 高建** 근래에 합의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범구 의원** 어떤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國務總理 高建**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필드 테스트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간에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범구 의원** 저로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호도하는 홍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國務總理 高建** 홍보는 정통부와는 관계가 없고 관련 업계가 디지털 방송 중단에 따른 심각한 매출 감소 또는 이미 판매된 HDTV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업계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정범구 의원** 총리께서 그런 답변을 받으신 모양인데, 이 광고는 형식상 19개 민간단체가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을 보면 陳大濟 정보통신부장관이 사장을 역임했던 삼성전자 또 미국식 전송방식을 택할 때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제니스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LG전자, 이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마치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런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이런 식으로 사회 각계, 방송계의 광범한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참여정부식의 사업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다시 국정을 조정하시는 입장에서……

○**國務總理 高建** 전송방식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陳大濟 장관이 보고를 했고 또 관계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는 않는데 다만 한 가지, 1997년에 이미 전송방식을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고화질 TV, HDTV가 약 150만 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재검토하자고 하는 것이라는 문제의 본질,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범구 의원** 방송계나 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요새 와서가 아니라 이미 정보통신부가 미국식을 결정하는 시점부터 같이 반대해 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지만 시간상 이것도 문화관광부장관에게서 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창 새 정부의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지만 국정은 지금 더 없는 혼란 속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수많은 비용과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재신임 투표를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리더십의 문제를 바꾸고 보다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리더십이 아니라 모두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우르는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원칙 없는 야합과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 말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광범한 민주개혁세력을 하나로 묶어 내고 그 바탕 위에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국정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충정으로 대통령께 고언도 하시고 국정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김락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락기 의원**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 나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경제 불황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대중은 꿈과 희망을 빼앗긴 채 미래가 없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로 나라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민생파탄과 국가위기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 20~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이 말해 주듯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터져 나오는 대통령 측근 비리와 부정 부패는 盧武鉉 정권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盧武鉉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대통령의 이념적 불안과 혼돈, 측근 비리와 코드인사에 의한 국정혼란, 그리고 민생파탄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언론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재신임을 결심하면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락기 의원 盧武鉉 정권 이후 국회가 129개 민생법안을 처리해 주었고 이라크 파병, 주5일근무제, 고용허가제 등 정부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안을 야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는데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감사원장 동의 거부만을 문제 삼아 국회와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책임전가수법으로,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국정혼란에 따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담보로 재신임을 묻는 정치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의 도덕성마저 무너질 경우에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국정쇄신의 의지를 갖고 재신임 결정을 하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락기 의원 20년 집사인 최도술 비서관 비리에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일이지 재신임을 물을 일이 아니며 또 눈앞이 캄캄

할 정도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에게 비리 전모를 밝히고 스스로 해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두율 씨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송두율 씨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마치 변호인인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난 3일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고,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원고에도 없는 송두율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며 사실상 선처에 해당하는 호소를 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간첩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판단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저도 그날 시정연설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송두율 씨는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송두율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스럽게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논쟁이 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원숙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 두 가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상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락기 의원 송두율 씨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 민주투사인 것처럼 미화됐는데 총리께서는 송 씨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송두율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좌우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하는 것만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고, 그 이외의 행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락기 의원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다는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송 씨 문제를 언급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독일에 가면 송두율 씨 같은 사람이 많다”고 했고 법무부장관께서는 “송 씨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연일 사법처

리 불가 방침을 시사했는데 총리께서는 두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두 장관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두 장관 모두 그것을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락기 의원** 본 의원은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해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락기 의원** 국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총리께서는 당연히 책임을 묻고 헌법에 보장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해임건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총리께서 직무를 유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國務總理 高建** 분명히 제가 주의를 촉구했고, 본인이 사과를 했고, 또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는 하지 않습니다.

○**김락기 의원** 민생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한 개인에게는 평생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청년실업이 급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경기불황에 의한 실업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산업사회가 구조적으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구조적인 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실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잘 안 맞는다든지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전반적인 불황, 그리고 산업사회의 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실업,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청년실업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총리 직속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청년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장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든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산·학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법, 고용 인프라의 확충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락기 의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초에 예상했던 5%대에서 2~3%대로 떨어질 경우 15만~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실업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철저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퇴 실업자가 40~50대에서 30대까지 확산되면서 지난 1년 사이 30대 실업자가 21%나 급증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0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30대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하고 사실은 비율적으로는 3%, 3.2%로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것처럼 30대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0대 실업자들에게는 창업정보의 제공 또는 전업직업훈련의 안내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본인이 스스로 찾으려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는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간접적인 유인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금년 8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가 341만 명에 이르고 있고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합칠 경우 4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오락가락하는 카드정책으로 오히려 도덕적 해이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정부는 지금 신용불량자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금융회사별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신용회복제도를 개인 워크아웃 시스템, 은행 간의 공동채권

추심 프로그램, 이와 같이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용불량자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경기회복을 빨리 해서 채무 상환 능력을 제고해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기가 회복되도록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락기 의원 또 지난해 자살자는 1만 3000명으로 10년 사이에 두 배가 늘어나 하루에도 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자살률과 범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 측면에서도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지적해 주신 대로 자살률의 증가가 참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기 위축에 따라서 제일 고통을 안고 있는 중산서민층들의 생활안정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대책, 예를 든다면 내년에 청년 실업에 5390억, 금년에 3500억입니다만, 약 1500억을 늘여서 5390억의 예산을 가지고 13만 명의 일자리를 새로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또 신용불량자들의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부터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참여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빈부격차 해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2개의 국정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차별 시정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을 설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다음은 사교육비와 원정출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총규모 17조 6000억 원으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사교육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 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는 역시 공교육 내실화이고 당분간은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입 경쟁 체제를 완화하고 특히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개발원이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성안 중에 있는데 지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락기 의원 그동안 일부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원정출산이 중산층, 서민층까지 확산되면서 원정출산을 위한 여행상품은 물론 전문 대행업체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원정출산 산모들에 대해 조사까지 벌이는 낯 뜨거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는 원정출산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분명히 원정출산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도덕성,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락기 의원 원정출산이나 조기유학, 이민열풍과 같은 ‘탈한국 신드롬’ 현상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대학을 졸업해 봐야 실업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고, 직장을 가졌다 해도 30대에 명퇴를 당하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보는데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앞으로 정부에서는 우선 교육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결국은 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김락기 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國務總理 高建** 사교육비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김락기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가 지난 9월 13일 한국을 러시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와 함께 언론자유탄압 감시 대상국으로 결정한 바 있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그렇습니다.

○**김락기 의원** 장관께서는 9월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답변에서 “국제언론인협회 결정은 한국 언론의 한쪽 측면만 집중 부각한 편향된 시각의 산물이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예, 올해 IPI총회에서 한국 언론 상황 관련 결의문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잘못된 사실관계와 일부 지극히 편향된 시각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균형된 판단을 하지 않은, 한국 언론 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결의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의문 채택이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IPI의 권위와 명예도 실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9월 18일 국정홍보처에서 항의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지난 8월 12일 盧武鉉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金文洙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IPI가 盧武鉉 정부에 대해 소송으로 일부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한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대통령께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정확한 사실보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보도를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인 소송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사례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보도를 바

로 세우는 데 있어서 소송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 사례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언론탄압이라기보다는 사실보도를 촉구하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언론발전을 위한 한 흐름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앞으로 직접 소송이 잇따를 경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도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저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또 대통령의 소송이 제기된 이래 신문 보도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또는 위축된 조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그렇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 자유라는 것은 단지 신문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떤 사회적 억압 없이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광범위하게 언론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신문으로서는 거의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때때로 많은 경우에 사회구성원의 표현을 억압하는 분위기를 신문 스스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언론 상황은 우려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IPI가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면 저는 그 결의를, 그 지적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김락기 의원** 본 의원은 장관께서 답변하시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 정권의 비판언론 탄압사례를 보면 취재제한 조치, 언론보도 성향분석, 가판 구독 금지, 오보와의 전쟁, 손해배상소송, 과도한 언론중재 신청 등 수없이 많습니다. 언론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고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지금 참여정부는 결코 언론과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있고 당연히 불필요한 전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건강

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브리핑제도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언론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은 그러한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런 과정은, 지금 현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언론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文化觀光部長官 李滄東** 언론문제에 있어서 언론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매우 깊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들어가세요.

총리께서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경제·사회적 발전에 상응하는 환경개선을 이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SOC 확충 정책으로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댐, 도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질문을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김락기 의원** 성장 위주의 SOC 확충 정책으로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댐, 도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환경과 개발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성장 위주의 경제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체제로 바꾸어야겠다 해서 전환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고, 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까지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10년까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해 주신 대로 환경의 중요성을 정부가 좀

더 인식하고, 앞으로 각 경제 주체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과 보전,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락기 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는 도심 속에 국립공원을 관통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데, 盧武鉉 대통령은 백지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사업 재개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함으로써 대선공약 자체를 백지화시켰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이 공사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2001년 11월—그러니까 2년 전부터입니다.—공사가 중단된 이래 지금까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불교계와 합의를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노선재검토위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대안을 합의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공론조사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불교계를 설득해서 공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락기 의원** 사패산 터널 공사 지연으로 지금까지 약 5000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지금도 하루에 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1억 불의 외자 유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인데, 결국 대통령의 정책판단 부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엄청난 비용은 국민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國務總理 高建** 이런 일이 없게 되려면 앞으로는 노선을 결정할 당시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주민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공사 중간에 이런 과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불교계의 수행환경도 보전하는 데 관심을 더 쏟으면서, 관련 주민들과 사전에 대화와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락기 의원** 국책사업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의 관념적 사고와 무소신 그리고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포퓰리

증식 해법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원칙과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문제가 국내 환경정책의 전면에 부각되고, 96년 OECD 가입 이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또는 잠재적 경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환경연계 무역규제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GNP 대비 환경기술 개발 투자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국내 환경통계 항목 수는 OECD 기준의 20~30%에 불과하며, 정확성 신뢰성도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친화적 사회·경제 체제 전환과 환경기술 개발 등의 정책 메커니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 高建** 2010년까지 환경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하수 슬러지 처리 기술이라든지 폐기물의 열분해 공정 개발이라든지 또는 악취센서 운영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락기 의원**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물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9%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38%에 불과해 도농 간 그 편차가 매우 커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部長官 韓明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우선 대부분의 지방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상수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공급 대상 취락이 도시의 아파트처럼 집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비해서 투자비가 굉장히 소요된다는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선 국고보조율을 더 확대해서 늘리는 것

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800억 원대에서 2004년도에 1200억 원대로 국고보조금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락기 의원** 농어민 가운데 203만여 명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고 280여만 명은 우물 또는 샘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나 우물, 샘물 등은 과학적인 정수처리 없이 이용하는 수준인데 산업화, 도시화,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원수의 오염 상태가 심화되어 농어민 483만여 명이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시지요?

○**環境部長官 韓明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락기 의원** 그리고 농어촌 주민 203만여 명이 이용하는 1만 1112개소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점검 결과 대부분이 노후되고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어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지금 농어촌의 오염에 취약한 간이상수도 문제는 우선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전문적이고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부족,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지금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를 해서 시설 개량을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화된 일체형 간이정수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함으로써 해서 전문적인 유지관리제도의 도입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이상수도시설 개선비용 국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고보조율을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락기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매년 노사분규를 절반씩 줄여 나가겠다고 했지만 현정권의 원칙과 기준 없는 노동행정이 노사분규를 조장해 왔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민주노총은 盧武鉉 대통령을 '선무당'에 비유하

면서 “노동 관련 대선공약과 인수위 노동정책 방향 그리고 최근의 노사문제에 관한 발언 등을 비교할 때 불과 7~8개월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노동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노동계의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部長官 權奇洪 노동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강경대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이 주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관된 정책 흐름에 본질적인 훼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락기 의원 본 의원은 장관의 말씀에 동의를 않습니다.

두산중공업·현대자동차·화물연대·철도노조·전교조 파업 등에 대해 정부는 일정한 방향이나 원칙 없이 대처해 왔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1차 파업 때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던 정부가 2차 파업 때는 연일 강경대응책을 내놓는 등 그때 그때 여론에 휩쓸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함으로써 혼란과 노정 불신을 가중시킨 데 대해 노동문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용퇴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部長官 權奇洪 책임질 일이 있으면 용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화물연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용퇴할 만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1차 때는 그들의 주장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사실은 정부가 미리 헤아려서 해결했어야 할 만한 사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주로 해서—그렇다고 해서 사후적인 법과 원칙의 적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이루어졌었고, 다만 이와 같이 이루어졌던 제도 개선이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문제, 즉 운송료 문제와 관련해서 2차 파업이, 파업은 아닙니다—2차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상황은 명분과 정당성 자체도 대단히 결여되

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대화의 바탕이 사실상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로 엄정하게 강경 대응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락기 의원 정권인수위 때부터 수없이 오락가락했던 외국인고용허가제 문제를 비롯해서 비정규직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별교섭체제 법제화, 불법파업이라도 주장이 옳다면 들어 주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 등이 노동자들에게 기대치를 높이고 친노정권이라는 거품을 만들어서 노정불안을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한 일부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시킨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部長官 權奇洪 예,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예시를 해 주셨는데요, 외국인고용허가제 문제를 두고 뭐 인수위 때부터 정부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다만 그 통과 과정에서 처리 과정에서 기업 쪽에서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을 요청해 와서 그것을 수용한 것뿐이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문제는 논의의 대상은 인수위 때 되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인수위보고서가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별교섭체제의 법제화를 주장한 바도 없었습니다. 다만 산별교섭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창출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제대로 끌고 가는 일 아니냐라는 논의는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불법파업이라도 주장이 옳다면 들어 주어야 한다는 저 자신의 발언은 혹시 오해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다스려야 할 대상이면 다스려야 하되,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에 정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었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크게 사회적 조명을 받지 않던 외국인, 외국인 문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사회적 의제로 설정은 되어 있었으나 적어도 인수위나 정부 정도의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논의의 대상이 됨에 따라서 기대치가 일부 높아졌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김락기 의원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혁신방

안을 확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해마다 노사분규를 절반씩 줄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올해 말까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權奇洪** 예, 합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듯이 사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의 구체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론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꼭 그런 유형의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이 활발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추출될 수 있고 공익위원 차원에서라도 하나의 안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락기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듯이 연말까지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데 장관께서도 인식을 같이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실현이 불가능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갖고 노동행정을 집행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들어가세요.

○**노동부장관 權奇洪** 예.

○**김락기 의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지방분권 3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민경제는 나날이 곤궁해지고 있으며 서민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표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으며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은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환골탈태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마지막 연설 순서입니다.

조정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무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문대학 90%, 대학교 83%로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사학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개혁은 교육발전의 시금석이자 교육개혁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학 재단들이 앞 다투어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에 나서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건국대학교 재단이 불법적으로 강행해 온 스타시티 사업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건대재단이 추진하는 스타시티 사업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지 3만 5000여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교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건대재단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마친 상태이고 오피스텔 백화점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학재단의 수익사업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질의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가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어디까지나 교육목적에 이바지하는 수준에 국한되어야 하며 교육 관계 법령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갖은 면세 혜택으로 사들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동산 사업에 이용하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더욱이 땅 투기, 땅 장사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더더욱 막아야 합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헌법은 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대재단의 스타시티 사업은 건대재단의 욕심에 맞장구친 교육부의 잘못된 법 집행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학정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육부총리, 질문하겠습니다.

건대재단이 교육용 재산인 교지를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 담당자들 모두는 실수 또는 착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시세로 환산하면 1조 원에 달하는 3만 5000여 평의 교지를 용도 변경하는 데 실수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건대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용 부지가 17만 4000평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3만 5000평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업이 워낙 크니까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다 보니 그 안에 1270평 정도의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가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도로와 호수였습니다.

○**조정무 의원** 교육부총리, 건국대학교가 대학 시설현황을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교육부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데 어떻게 용도 변경할 때만 다르게 됩니까? 왜 모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조정무 의원** 아니 부총리, 얘기를 분명히 해요. 이것은 교육부와 건국대학이 합작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올리다가 왜 용도 변경할 때만 틀립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래서 최종 매도할 때는 이 사실을 알고 시정했다고 합니다.

○**조정무 의원** 다음에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의 재산이라도 용도변경 허가를 거쳐서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시키면 매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즉 두 번의 허가를 거치면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해석대로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그러면 교육부의 해석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아니면 동의 안 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물론 당연히 교육용 재산은 매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무 의원** 동의하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예, 그러나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서 용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정무 의원** 그런데 교육부의 허가라는 것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건국대학교와 교육부가 대학 시설현황을 보고할 때는 정상적으로 잘 보고했는데 용도변경 허가할 때는 허위로 기재했다는 얘기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이 경우의 허가는 교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이 허가가 재량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재량권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는 단지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부총리,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라는 것은 법 집행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충분한 추상적인 지침에 불과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에 의하면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준칙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렇지

않고 있어서 이를 해태하고 있고 결국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사학재단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미비점을 악용하여 땅장사에 앞장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재량준칙도 없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 온 것에 대해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계속되어 왔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무시해 온 관행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교육부의 지침인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사학재단의 교육사업을 위해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규정을 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건대재단의 스타시티 사업은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피성이 인정되려면 이 사업부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건대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고, 또한 우선적으로 처분할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어야 할 것인데 건대재단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해 주어 결국 건국대의 교지 보유율을 교지 기준면적 100% 미만으로 먼저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이런 식의 허가가 있게 되면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하기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결국 교육부의 용도변경 허가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교육부총리, 동의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런데 법정 확보율이 100%가 넘으면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 확보하자 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건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조정무 의원** 용도변경 허가가 나서 해명을 교육부에서 했는데 이와 같은 처분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는—대학지원국장의 얘기입니다—해명성 기자회견에서 “용도변경 신청서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매도허가 신청을 허용한 것은 대학 재정 확충 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적 판단 때문에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허가를 해 줘야 될 정도로 건국대의 재정이 열악했는지, 이 허가가 안 되면 건대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지, 이런 식이니까 특혜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 이 용도변경 허가가 불법이고 명백한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제가 보건대는 건국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는 법령에 따라서 시정·보완 과정을 거쳐서……

○**조정무 의원** 교육부총리! 교육부와 건대가 이렇게 서류상의 협정을 하고도 법령 운운하고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그 과정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하고, 야구장, 축구장, 대체교육시설 확보, 그리고 각종 교사 신축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훨씬 양호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특혜 부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정무 의원**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면,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은 오피스텔 짓고, 어느 대학은 아파트 지으려고 하고, 건국대학 때문에 어느 대학은 골프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지금 서울 소재 대학 중에 기본재산을 100% 이상 가지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평균 육십이삼%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정무 의원** 지금 모 대학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또 모 대학은 골프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모 대학은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해요. 대학을 거명하기가 그래서 안 하는데, 건국대학에 이렇게 교육부가 허가를 내 주니까 모든 대학이 그렇게 뒤따라가고 있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아마도 100% 미만이면 일체 허락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무 의원** 교육부장관, 이렇게까지 교육부와 건국대학이 짜맞추기를 해 놓고도…… 교육부장관이 정직한 태도를 보여야지 왜 이렇게 변명

을 하고 있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저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무 의원 교육부는 뒤늦게 위법한 허가를 시정하기 위해서 건대재단에 이미 용도변경허가를 마친 수익용 재산을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재차 용도변경을 종용하였습니다. 지금 부총리 오기 전입니다.

건대 재단은 건대 서측 부지의 일부를 다시 용도변경 신청하여 교지 보유율을 100% 이상으로 다시 확보했어요. 이를 이유로 교육부는 건국대 교육용 재산의 용도변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위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처분은 직권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교육부는 스스로 나서서 특정재단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건대는 교육용으로 재차 용도 변경한 서측 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다시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건대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다시 수익용으로 바꿔 줄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의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일련의 교육행정의 행태로 보아 건대의 계획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합니다.

부총리,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허가 처분은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건대 교지에 대한 용도 변경허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직권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사실 교육부의 행정적 실수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법정 확보율도 100%를 지키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건대가 이 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그 수익금이 학교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에 쓰이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무 의원 이렇게 허위로 위조해서 하는 대학을 지금도 교육부총리는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는 스

타시티 부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고 한 번의 기부채납으로 이중 삼중 사중의 특혜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견해를 총리, 말씀해 주세요.

○國務總理 高建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셔서 제가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서울시가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준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스타시티 부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미 97년에 지구중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01년도 당시에 스타시티 부지가 위치한 광진구의 경우 상업지역이 전무해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그리고 지역 여건상의 상업수요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의 기부채납으로 중복해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건국대학이 도로 용지, 공원 용지, 구민회관 용지 등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했을 때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상향과 사선제한의 완화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무 의원 총리, 이것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특혜를 주었는데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물론이려니와 용적률, 높이제한, 사선제한, 모든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지적대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회의록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것은 난개발이고 절대로 해야 되지 않을 것을 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이렇게 한 번의 기부채납으로 많은 특혜를 주었는데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하지만 건대가 한 그 기부채납은 이것이 다른 데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자기 학교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 준 것입니다.

또 지금 말하는 구민회관은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광진구와 협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혜인데 총리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군요.

이 스타시티는 학교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교육부, 서울시, 광진구가 합법을 가장하여 학교법인 건국대학에 향후 30년간 1조 7434억 원의 엄청난 사업이익을 안겨 준 전형적인 특혜성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해 봐요.

○國務總理 高建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타시티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전문적인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친 것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층·과밀화되지 않도록 기준에 따라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적해 주신 교육부의 건국대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은 아까 부총리께서 보고드린 대로 주상복합 타운을 건립해서 고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대학 제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축재원 등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스타시티 부지가 있는 건대 입구를 광진구의 지구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큰 틀 안에서 관련 적법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승인한 사안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정무 의원 지금 스타시티가 짓는 그 자리가 63빌딩 5개가 들어가는 과밀·고층 빌딩화되어 있어서 교통이라든가 숨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것은 반대가 많았는데도 건국대학 로비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교육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만 만성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이 1년에 1000여 명에 이르고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질병으로 휴학하거나 중퇴하는 학생 수가 한 해에 7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치료가 끝난 후에 복학했을 때 2~3년 후배들과 함께 교육부총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학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장애인들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총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문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신상발언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질문을 종결하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에 모두 예순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들어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고가 컸습니다.

특히 5일 동안에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의장이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기회에 여야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정치문제에 대해서 논점은 주로 정치자금에 관한 공방입니다. 누가 누구를 공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정부질문이 끝났으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유지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아픈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9월에 중국과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가고 베트남을 가는지를 현장에 가서 뼈저리게 저는 느꼈습니다.

과연 그 대비책이 있는 것인가?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장관 여러분들께서는 중국과 베트남을 한번 시찰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서비스’ 용어는 한국에 무성하지만 중국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 못 하고 있습니다. 꼭 임금이 싸서 가는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서 왜 사업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전한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호소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기업을 지키고 우리 경제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대오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일 동안의 대정부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대안에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의원신상발언

(18시30분)

○議長 朴寬用 그러면 신상발언 신청을 하신 이미경 의원 먼저 발언하십시오.

○이미경 의원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저는 오는 27일 국민참여통합신당의 창당주비위 발족을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제15대 국회에 처음 등원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16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해 온 깨끗하고 합리적인 정책 정당,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국민정당을 만드는 정치적 신념을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실천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고 고락을 함께하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헤량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5대, 16대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7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정치에도 희망의 씨앗은 얼마든지 싹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있는 한 그 씨앗은 푸른 이파리가 되고 여문 곡식이 되어 선진정치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16대 국회 상반기 문화관광위 활동을 하면서 만난 정병국, 강신성일 의원은 비록 정당은 달랐지만 저에겐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의원님들이셨습니다. 함께 국립박물관소위 활동을 하면

서 이른 새벽에 세미나를 열고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면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이 이런 거구나, 여야 간의 정치공방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자들이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또 얼마 안 되는 여성 의원님들, 이분들도 저에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야를 떠나 호주제 폐지, 성희롱 방지, 육아 문제 등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였습니다.

제가 이 순간 국회를 떠나면서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국회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생산적인 정책 논의의 장으로 변해야 하고 또 상당수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열렬히 그런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국민들께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당당해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정치공방, 무책임한 폭로전, 저질 인신공격, 이런 암적 요소들과 우리 스스로 싸워서 이겨야 국민들에게 당당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5대 국회에 꼬마 민주당의 전국구 비례대표의원으로 첫발을 내딛었지만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하는 바람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민이 많았지만 국민이 저에게 부여한 임무를 소신껏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동티모르 파병이나 노사정위원회법 등에 있어서 소신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다가 당으로부터 출당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6대 국회 후반부에 제가 소속된 민주당의 개혁을 둘러싼 이론이 끝내 내부에서의 개혁의 길을 찾지 못하고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고 보니 합당을 하고, 어느 날 당무회의에 가니 머리채를 잡히는 등 국민에게 절망을 안기는 불가측한 정당 구조하에서 전국구 의원들은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소신 때문에 국회의원 직을 내놓는 일은 제

가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제 17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문제가 꼭 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요즘 SK비자금의 정치권 유입과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엄청난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정치권은 예외없이 서로의 흠을 들추며 소모적인 공방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이 재신임 선언을 한 것은 이번 일을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정국 주도를 위한 술책이라거나 야당 탄압의 구실은 결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도 살고 여야가 함께 살려면 국회가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여 정치권 스스로 자정의 계기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정치자금 문제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만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 허운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허운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운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16대 국회의원으로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2000년도에 처음 국회에 들어와서 부족함이 많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아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국정감사의 소임도 다했기에 훌가분하게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가고자 합

니다.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일말의 책임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만, 희망의 정치를 위해서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의원 직을 떠나서 신당행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원 직을 떠나는 지금 이 순간 그동안 치열하게 일하고 보람을 느꼈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2000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해서 3년 반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를 만들어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50차례에 가까운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고, 우리 IT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외 여러 나라를 누비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통신 관련 의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IT의원연맹을 창립하고 초대 회장 직을 맡아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전에 대학교수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 허운나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의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으로 가는 것은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을 향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으나마 희망의 정치를 이루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의 불씨를 보여 주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허운나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27일 의원 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정치환경에 도전하는 저에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두 여성 의원, 지난 3년 반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出席議員(210人)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姜雲太
姜仁燮	강재섭	姜昌成	高興吉
具鍾泰	권영세	권영세	權五乙
權哲賢	金敬天	金敬天	金敬天
金杞培	金德龍	金德龍	金德龍
金東旭	김만제	김만제	金萬濟
金武星	김부검	김부검	金富健
金聖順	김영환	김영환	金玉斗
金容甲	金龍學	金龍學	金雲龍
金允式	金正숙	金正숙	金鍾河
金宗鎬	金燦于	金燦于	金忠兆
金台植	金鶴松	金鶴松	金형오
김홍신	김희선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都鍾伊	都鍾伊	孟亨奎
목요상	朴寬用	朴寬用	朴權惠
朴明煥	박병윤	박병윤	朴相熙
朴世煥	박시균	박시균	朴源弘
朴仁相	朴鍾雄	朴鍾雄	朴鍾雄
朴柱宣	朴憲基	朴憲基	朴憲基
박혁규	白承弘	白承弘	白承弘
서병수	徐清源	徐清源	徐清源
薛勳	송영진	송영진	송영진
송훈석	申榮國	申榮國	申榮國
申榮均	沈載權	沈載權	沈載權
심재철	安東善	安東善	安東善
安商守	梁正圭	梁正圭	梁正圭
嚴虎聲	원희룡	원희룡	원희룡
劉容泰	柳興洙	柳興洙	柳興洙
윤경식	尹榮卓	尹榮卓	尹榮卓
尹鐵相	李敬在	李敬在	李敬在
李根鎭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李方鎬	이상득	이상득	이상득
李相培	이성현	이성현	이성현
李嬾淑	이우재	이우재	이우재
李元昌	李允洙	李允洙	李允洙
이인제	이재정	이재정	이재정
李在昌	李漢久	李漢久	李漢久
李漢東	李協	李協	李協
이호웅	林仁培	林仁培	林仁培
임채정	張光根	張光根	張光根

장영달	張在植	張泰玩	全甲吉
田瑢源	전재희	전재희	정갑윤
鄭均桓	정동영	정동영	정동채
정몽준	정범구	정범구	정병국
정의화	鄭鎮碩	鄭鎮碩	정창화
鄭哲基	조배숙	조배숙	정조영
조성준	趙舜衡	趙在煥	조정무
趙漢天	朱鎮旻	천용택	천정배
崔明憲	崔炳國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최용규	최재승	秋美愛
河舜鳳	韓昇洙	咸錫宰	咸承熙
허운나	玄敬大	홍문종	洪思德
洪準杓	황우여		

○出張議員(5人)

박종희	송영길	오경훈	柳漢烈
이희규			

○請假議員(32人)

姜昌熙	高珍富	金景梓	김덕규
金秉浩	김성호	김원웅	김일윤
김홍일	金孝錫	문석호	박상규
朴相千	박양수	朴鍾根	박신계
오장섭	李康斗	이규택	이승철
李良熙	李仁基	李正一	이창복
이해찬	임종석	정세균	鄭宇澤
曹喜旭	韓和甲	許泰烈	홍재형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무총리	高建
부총리겸	尹德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康錦實
법무부장관	許成寬
행정자치부장관	李成滄
문화관광부장관	李金花
보건복지부장관	韓明淑
환경부장관	韓奇洪
노동부장관	權奇銀
여성부장관	池銀姬

○出席政府委員

행정자치부차관	金住炫
---------	-----

【報告事項】

○常任委員長辭任書提出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연
(10월22일)

○特別委員長選任

감사원장(전윤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

회

위원장 유 용 태
(10월23일)

○幹事選任

위 원 회	위원명	교섭단체
감사원장(전윤철)임명 동의에관한인사청문 특별	최연희	한나라당
	조재환	새천년민주당
	이종걸	국민참여통합신당 주비위원회

(10월23일)

○議案提出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10월22일 정부 제출)

**수도권공장입지규제등수도권과밀억제정책의규제완화
반대결의안**

(10월22일 김성조 · 권기술 · 김경재 · 김락기 · 김무성 · 김학송 · 서병수 · 안택수 · 유재규 · 윤경식 · 윤한도 · 이상득 · 이양희 · 이인기 · 전용학 · 정문화 · 정철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自然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천용택 의원 대표발의)

(10월22일 천용택 · 남궁석 · 송석찬 · 정동채 · 이창복 · 이강래 · 김원기 · 신기남 · 김덕규 · 김희선 · 김부겸 · 송영길 · 유재규 · 김성호 · 이부영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農漁業災害對策法中改正法律案(천용택 의원 대표발의)

(10월22일 천용택 · 남궁석 · 송석찬 · 정동채 · 김명섭 · 이창복 · 이강래 · 신기남 · 김원기 · 김덕규 · 김희선 · 김부겸 · 송영길 · 유재규 · 김성호 · 이부영 의원 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酒稅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10월22일 임인배 · 김광원 · 박명환 · 박승국 · 박헌기 · 서상섭 · 송광호 · 윤두환 · 이상배 · 조정무 의원 발의)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10월22일 나오연 · 이상배 · 최병국 · 안택수 · 김정부 · 정문화 · 박종근 · 박승국 · 이원형 · 신현태 · 이한구 · 김동욱 의원 발의)

관세법중개정법률안(나오연 의원 대표발의)

(10월22일 나오연 · 이상배 · 최병국 · 안택수 · 김정부 · 정문화 · 박종근 · 박승국 · 이원형 ·

신현태 · 이한구 · 김동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議案撤回

酒稅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9월1일 임인배 · 김광원 · 박명환 · 박승국 · 박헌기 · 서상섭 · 송광호 · 윤두환 · 이상배 · 조정무 의원 발의)

10월22일 발의자 철회요구